

소련 국가안보 정책의 변화와 결정요인

이 석 호

이 글의 주목적은 1917년 10월 블쉐비키혁명부터 1991년 12월 소연방이 붕괴될 때까지 소련의 국가안보 개념과 정책의 변천과정과 공산주의 지배체제와 소연방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추가적으로 소련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안보정책을 갖고 있었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의 이론에 관한 고찰로써 국가안보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호성, 국가안보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내적, 국제적 모순과 갈등, 국제질서구조와 국가안보의 상관관계, 탈냉전 이후 국가안보연구의 문제점들을 소개하였다. 둘째로는 소련의 국가안보 개념과 정책의 변화과정을 크게 세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① 공산주의체제 정착기(1917-1953), ② 강대국으로서 등장기(1953-1985), ③ 공산주의체제 붕괴기(1985-1991). 세째로 왜 최근에 소련의 국가안보 개념은 절대적, 군사적 안보개념에서 상호공존과, 비군사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나? 궁극적으로 왜 공산주의체제는 망하고 소연방은 붕괴되었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6개의 측면, ① 이데올로기와 정통성, ② 민족문제, ③ 경제적, ④ 외교적, ⑤ 군사적, ⑥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분석 시기는 봄의 상 1917년 10월 혁명부터 1985년 3월까지로 하였다. 네째로 이러한 소련의 붕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대한국 안보정책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대한국 안보정책 결정 요인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국내정치적 조건, 지정학적으로 대미·일·중국정책, 한국과 쌍무관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지배적이었다. 한반도 주변 4국중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가장 피를 적게 흘렸다. 즉 한반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가장 소극적인 이해관계를 보여준 국가이다.

I. 서 론

1917년 10월 블쉐비키들에 의해 소련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에 가져다 준 충격은 불란서혁명과 비교할 만하며 그 이후 이들이 세운 공산주의이념과 체제가 국제정치질서에 끼친 영향은 한때나마 인류의 미래에 또 하나의 길을 열어 놓았었다.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세계질서는 또 변했다. 동서냉전구조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소련공산당도 해체되었고, 소비에뜨국가체제도 없어졌고, 소연방은 각 공화국별로 독립하여 15개의 주권 독립국가가 탄생하였다. 민족 단위의 국가가 아직까지는 국제행위의 기본단위임을 보여주었다.

세계적 강대국의 내정변화는 이처럼 세계질서를 혼들었고, 특히 그 주변국가들은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거나, 때로는 그 강대국 정치변화의 소용돌이에 같이 파묻혀서 격변을 겪기도 한다.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으나 러시아혁명은 독립운동에 참가한 지식인들

에게 전달되었으며, 한국 독립운동의 큰 백을 형성하게 하였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된 이후에도 공산주의는 한반도에서 하나의 강력한 정치이데올로기로써,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 한국사회와의 갈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련의 붕괴가 한반도에서 냉전의 유산을 제거시키지 못했지만, 한국은 소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예방과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들의 많은 소련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연구에 많은 정열과 시간을 보냈다. 이제 우리는 “왜 소련이 붕괴되었는가?”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처음에 소련의 안보정책 변화에서 어떻게 어려운 대내외 문제들을 극복하고, 공산주의 체제가 생존하여왔으며,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생존양식은 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구기간중 소련의 붕괴로 이제는 연구의 초점이 “어떤 요인과 배경 때문에 소련은 공산주의체제를 유지 못하고 붕괴되었는가?”가 되었다.

연구의 방향이 정반대로 되어 연구의 초점, 국가의 홍망과 국가안보에 관한 이론과 개념의 재정립이 요청되며, 이에 따른 자료의 수집과 분석도 새로운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 논문의 커다란 한계성이다.

이 글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의 이론에 관한 고찰로써 국가안보의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의 어려움과 모호성, 국가안보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 국제환경과 국가안보의 상관관계, 탈냉전 이후 국가안보 연구의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둘째로는 1917년 블쉐비키혁명 이후부터 1991년 12월 소련붕괴시까지 소련의 국가안보개념과 정책의 변화과정을 크게 세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① 공산주의체제 정착기(1917-1953), ② 강대국으로써 등장기(1953-1985), ③ 공산주의체제 붕괴기(1985-1991).

세째로 왜 최근(1985-1991)에 소련의 국가안보개념은 절대적, 군사적 안보에서 상호 공존적, 비군사적으로 바뀌었나? 궁극적으로 왜 공산주의체제는 망하고 소연방은 붕괴되었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6개의 측면, 즉, 이데올로기와 정통성, 민족문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분석시기는 편의상 10월 혁명부터 1985년 3월까지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련의 붕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대한국 안보정책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소련의 안보정책 변화에 한반도가 영향을 준적은 없지만, 그 반대로 역사적으로 소련 내부의 변화는 한국에 영향을 주어 왔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계,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강대국들과의 관계, 러시아 자신의 대한반도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러시아의 대한국 안보정책 결정요인을 찾아보려고 했다.

Ⅱ. 국가안보에 관한 이론적 고찰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미·소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어느 한 진영에 포함시켜서 지켰다. 특히 2차대전 이후 태어난 많은 신생국들은 자신들이 선택하기보다 주어진 국제구조 속에서 자신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범세계적인 공산주의체제의 안보로 간주하였고, 특히 민족과 국가의 개념보다 노동자와 국민의 개념을 중심으로 단결을 시도했다.

1970년대에 각 국가들은 국제에너지 파동으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경제의 중요성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환경공해, 식량, 마약, 전염병 등의 문제는 국가안보란 군사력보다는 비군사적 능력, 독자적이라기 보다 상호의존 책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지난 1945년부터 약 반세기 동안 인류는 이러한 책임을 했지만, 최근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기본단위는 약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족국가(또는 국민국가, nation-state)이다. 공산주의체제가 물发挥作用한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 중동지역에서 분쟁의 지속, 걸프전쟁, 군비증강, 제3세계국가들의 경제적 각성 등은 모두가 민족국가 단위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민족국가의 생존양식은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여 생존기반을 확대하려는 행태는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다.

1. 안보개념

국가안보란 용어는 2차세계대전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냉전시대에 있어서 대외정책을 정당화하는 금과옥조의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그 개념은 다양하고 애매한 것이 특징이다. 조셉 나이(Joseph S. Nye)에 따르면 “좁게 정의한다면 안보란 생존에 대한 위협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생존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 이상으로 더 안전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생존보다 장차 다른 많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에 관하여 확신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안보문제는 불확실성 정도가 문제이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확실성을 위하여 얼마만큼 더 지불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말은 안보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안보개념을 쉽게 정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Nye, 1988: 236).

따라서 전문가마다 ① 우리는 누구인가? ②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③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④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⑥ 목적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 정의하는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조르단(Amos A. Jordan)은 “협의의 정의는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방위란 개념과 같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물리적 위협로부터 자국민과 자국의 영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경제적, 정치

적 이익들을 다양한 수단에 의해 보호하고 손상을 막는 것으로 보다 넓은 뜻으로 쓰인다.”고 정의하였다(Jordan, 1981:3). 베르코비츠(Morton Berkowitz)와 복크(P. C. Bock)는 국가안보를 “한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내부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했다(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II, 1968, p.40). 월퍼스(Arnold Wolfers)는 “안보란 객관적 의미로는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위협의 부재를 뜻하며 주관적 의미로는 그러한 가치들이 공격받으리라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바 있다(Wolfers, 1952:485). 이처럼 협의·광의 또는 주관적·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개념은 논쟁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개념정의는 분명치 않아도, 학계에서는 안보개념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전략적 정의(strategic definition)와 이상주의자들의 경제적 비전략적 정의(economic nonstrategic definition)라는 두개의 부류로 구분되고 있다. ‘권력정치’의 관점으로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안보가 최상의 국가목표이며 국제정치에서 안보위협은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민족국가가 자기보존을 위해서는 군사적 우위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전략적 세력균형을 이루어야하며 이 양자를 다같이 확보할 수 있으면 더욱 안전하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이상주의자들은 국가경제의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경제자원의 확보, 전쟁체계에 있어서 경제의 기능을 국가안보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크라우스(Krause)와 나이는 경제안보를 “경제복지의 심각한 박탈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경제적 비효율의 수용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또는 통합에서 얻는 득을 희생시키면서 국가적 접근방법을 강조할 때 경제안보를 선택하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Krause and Nyc, 1975: 275). 전쟁체계에 있어서 경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안보비용, 특히 군비지출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안보비용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특히 기술의 발전과 고용 창출 효과로 경제의 활력 소가 된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국가안보문제의 연구 흐름은 대단히 좁게 선정되어 군사적 안보 현실주의자들의 전략적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학계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안보의 연구대상은 주로 억제(deterrence), 군비통제(arms control),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 군사기술(military technology), 무기체계(weapon system), 전략(strategy)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점은 주로 2차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양강대국 사이에 전개된 냉전의 문제가 국제정치학의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경향이었다. 즉 냉전상황에 의해 규정된 인식의 틀을 바탕으로 안보의 문제는 미소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는 세계 군사경쟁 관계의 연구로 되어 버렸다.

¹ Report from Iron Mountain on the Possibility and Desirability of Peace,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7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안보의 연구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이 그 중심과제 이었고 이 위협도 기본적으로 세계적 냉전상황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영미학계에서 유행하는 안보문제연구의 틀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안보 문제를 연구하여 왔다.

국가안보 개념의 애매성을 증가시켜주는 개념으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국가안보 이익’이나 ‘국가이익으로서 국가안보’라는 용어에서 보는 바와 같다. 두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국가이익은 국가안보가 냉전체제하에서 주도적인 개념이 되기 이전부터 ‘외교’의 기본원리였다. 2차대전 이후 국가안보가 국가이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므로 두 개념은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월퍼스는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라는 두가지 모호한 개념의 정의에서 오는 불편을 없애고자 ‘국가 안보 이익(National Security Interes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무엇에 대한 안보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에도 국가안보개념의 애매성이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지켜져온 최소한의 핵심적 가치를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존이 훼손되지 않은 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목적이라고 규정하는데 동의한다 하여도 어떤 국가들은 보다 많은 주변적 가치들을 핵심가치들과 함께 보호하려고 하는가 하면² 또 어떤 국가들은 핵심가치들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기도 한다.³ 이러한 기본적인 이유는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 주관적이며, 동시에 그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도 상대적,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2. 국가안보의 딜레마

국가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든간에 모든 국가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대내적, 대외적으로 국가안보 유지에는 많은 도전과 문제점들이 있다. 국제환경과 연유되는 안보 딜레마는 상호불신과 상호봉포에 바탕을 둔 상호경쟁에 있다. 각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큰 안전을 얻기 위하여 보다 많은 힘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할 확률은 거의 회박하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도하는 힘의 증강 노력은 상대의 불안의식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상대는 다시 자신의 힘의 증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다시 자신의 불안의식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게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상태를 이루고 있는 국제정치 체계에서 야기되는 상호불신 때문에 모든 낭사국들은 먼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다.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가능성성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² 미국은 핵심가치가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기 때문에 자국민의 해외투자나 해외사장의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시대를 보면 비핵심적인 기득권의 보호를 위해 군사기지와 안전구역을 억지로 확보하고, 여기에 국가적 핵심가치를 부여했다.

³ 예를 들어 영국은 홍콩의 안보를 보다 강화하려는 조치를 80년대부터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과거 체코인들은 소련에 대항해서 독립을 지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제정치의 상황이다(Herz, 1919: 231-243).

근대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군사국가로서의 성격을 갖고있다(이용희, 1962: 110-148). 절대주의 국가로 출발한 근대국가는 시작부터 주변국가들과의 군사적 대결과정에서 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목표의 설정과 집행은 일단 전쟁에서 생존 내지는 승리에 맞추어졌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의 빙도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적이고 상호안보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는 각국들의 대결은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의 준비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형태로 이루어졌다(Mann, 1984: ch.5).

역사적으로 전쟁 준비는 군비경쟁을 일으켰고,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비경쟁의 첫째가는 촉진제가 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한 산업혁명은 군사력의 기계화(mechanization)를 초래하였다. 철강제조법, 화약의 발명, 모르스 전신법, 증기력의 이용 등은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기관총, 핵포, 잠수함, 전차, 항공기 등을 출현시켰다. 2차대전 이후 가장 두드러진 군비경쟁의 특징은 순수과학이 전쟁수행 능력의 제고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핵무기의 개발이며, 제3의 군사혁명이라고도 한다.

이 핵무기의 개발은 전쟁사와 인류역사에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핵무기가 갖고 있는 고도의 파괴력으로 인하여 전쟁이 대외정책의 수단이라는 전통적 관념에 수정을 가하였다. 즉 핵전쟁은 적어도 전쟁당사국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외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핵무기의 개발과 더불어 그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래적 의미의 방어개념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군비경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적 분석과 과학적 지식의 상호작용이 자국이 비축하고 있는 무기의 질과 양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어떤 주어진 시점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근거로 하는 작업은 각국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상대로 군비경쟁을 하게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극단적 안보의 딜레마 상황 하에서 전쟁과 평화의 구분은 개념적으로만 가능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Pearton, 1982: 256-257).

국가간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그 국가들간의 안보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상대방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면 안보의 딜레마는 더욱 커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과 20세기초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딜레마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서방국가들과 구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2차대전 이후 국제체제가 불안정했던 주요 원인이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갖는 일차적인 연관성은 의식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가치의 충돌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관계는 행위의 체계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사실인 한에서 국제적 안정은 주어진 체계 안에서 행동하는 단위들이 서로 갖는 인식체계가 어느 정도 양립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Kim, 1970:123). 국가들이 상호작용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수단은 구두 또는 다른 형태의 상징체계인데 이러한 상징들은 여러가

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에 있어 이질적 체계 속에 속해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송신자의 의도가 수신자에 의해 전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지식이나 상상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하나의 국제체계의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견지하게 되는 경우 그 체계는 대단한 정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안보의 딜레마가 더 커지게 된다.

국가안보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노력은 국제적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도전을 받는다. 국가는 국민과 영토라는 물리적 기반, 국가의식이라는 이념적 요소, 그리고 통치기구로서 정부로 구성된다. 국가안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국가의 본질이 다차원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를 구체화하는 실체는 정부이다. 따라서 국가는 구체적 정부와 동일시 된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정부는 엄연히 국가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통치기구일 뿐이다. 정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국가는 변치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다. 정부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통치엘리뜨들이다. 국가안보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도 그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 때문에 국가이익은 무엇이든 통치엘리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정책도 그와 같은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이유에서 벗어나 정당화된다.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통치 엘리뜨들의 정책이 설득력과 권위를 지닐 수 있는 여파장치가 공개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국민 일반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일반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치엘리뜨들이 국가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이 국가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종종 분명한 차이가 생겨난다. 그와 같은 의견의 차이는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통치엘리뜨들의 이익이 곧 국가이익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내부적 불만 요인이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정당성이 도전을 받는 통치기구는 외부의 위협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도전에 의하여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최근 소련이 그 적합한 예가 될 것이다.

내부적 도전을 받는 곳에서는 정부가 그들 자신의 안보를 국가의 안보와 동일시하면서 국내정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안보가 국가안보와 항구적으로 결부된 곳에서는 경찰국가적 장치를 이용하여 정부는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들의 비판세력을 외국의 조정을 받는 앞잡이들이라고 몰아 세우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성을 상실한 통치엘리뜨들의 그와 같은 시도는 더 큰 대중적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되는 경우 국가안보는 커다란 딜레마에 빠진다.

국가는 물리적 실체이면서, 국가의식이라는 이념적 요소를 갖고 있다. 국가의식은 질서구축, 공동선, 외부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등의 기본적 기능과 연결하여서만은 설명

될 수 없는 그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자존 등의 요소들이 그 ‘무엇’의 일부가 되고 있다. 만일 국가의 설립이유가 단순히 ‘자연상태’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민족적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범지구적인 국가건설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식’이라는 요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의 지구적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 서로간의 갈등과 대립이 끊임 새 없는—이 되었다.

국가의식이야말로 국가안보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부각시켜 준다. 국가의식의 핵심에 ‘민족’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이란 동일한 문화, 인종, 전통적 유산, 동일한 삶의 터전 등의 공통적 유대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진 배타적 동류의식의 결성이다. 민족과 국가가 단일체이면서 민족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될 때처럼 국가안보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가 내부의 민족적 결속이 취약한 다민족 국가의 경우 국가안보의 내부적 조건은 매우 불리하다.

국가의식의 약화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만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통치엘리트의 정통성 결여,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규범의 문란, 경제적 빈곤의 만연 등도 국민들의 국가의식을 약화시킨다.

3. 국제체제와 국가안보

국가안보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들간의 상호작용 수준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의지를 넘어서는 국제체계의 수준 그 자체에서도 발생된다.

캐플란(Morton Kaplan)은 6가지의 국제체제모델—세력균형, 느슨한 양극체제, 경직적 양극체제, 유닛 비토(unit veto), 보편적 체계, 위계적 체계—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체계들이 각 개별국가의 안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Kaplan, 1964). 홀스티(K. J. Holsti)는 국제체계에 관하여 위계적, 분산적, 분산된 불력, 극화된 체계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 자신은 안보위협의 정도와 모델의 차이 사이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Holsti, 1967:91).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층화, 극성, 권력배분 및 동질성의 네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국제체계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 로즈크랜스(Richard Rosecrance)는 흥미있는 가설을 제시했다. 즉 양극체제하에서는 국제적 폭력의 분출이 덜 빈번히 일어나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그 강도가 높고, 반면 다극체제에서의 양상은 정반대라고 한다(Rosecrance, 1973: 118).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로즈크랜스는 경직된 양극체제가 국제적 갈등을 통제하는데 있어 가장 완고한 체제라고 하며, 허츠도 양극체제가 가장 강력한 안보딜레마를 낳는다고 주장하면서 로즈크랜스의 말에 동의한다(Herz, 1959:241). 도이취(Karl Deutsch)와 싱어(David Singer)는 다극체제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양극체제에 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며(Deutsch and Singer, 1964), 이와 반대로 왈츠(Kenneth N. Waltz)는 양극체제가 보다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또한 우연적 사고를 덜 낳기 때문에 국제안보상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Waltz, 1979:ch.8).

이러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안보에 관한 논의가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으나 실제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높은 정도의 추상성과 권력배분 양식 하나의 변수만을 논의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안보의 조건은 권력배분 양식 이외의 많은 변수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특정구조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제체제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공산주의체제를 대변하였던 맑스주의이론을 제외하고,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입장은 비교 설명하려고 한다. 전통적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중상주의가 지배적인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여 왔다. 즉 국가들간의 경제관계는 「제로 핵 게임」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으로 상호 인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각국들은 국제교역 그 자체는 필요성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기본적으로는 자급체제를 지향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손실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로 인정되었다(Buck, 1974).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이 현대에 와서 크게 부활한 것은 1930년대이다. 이 때의 경험은 전후 미국을 주도로 한 자유주의 경제체제 부활운동의 역사적 기반을 이루었다. 즉 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내포하는 체제이고 따라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Gilpin, 1977).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중상주의 정책을 선택할 경우 각국은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만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획득은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대외 팽창인데 이러한 정책은 각국의 군비와 대외적 호전성을 높이게 된다. 즉 중상주의의 최대 위협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적 경쟁에 각국의 권력을 직접 개입시키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위와 같은 중상주의체제의 단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상당한 이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경제과정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 경제 그 자체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에 따라 각국의 사정이 다른 나라의 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서는 상당한 취약성을 들어낼 위험이 있다. 국가의 구분이 현저히 남아있는 실정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갖는 취약성은 역으로 국제정치관계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73년과 1979년의 석유위기를 통해서 잘 들어난 바 있다. 자유주의는 국가간의 중대된 상호의존을 통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중대된 상호의존이 안전한 세계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안보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자유주의에서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가안보의 개념이 재규정되는 것으로 그칠 뿐이다.

두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반드시 어느 쪽이 보다 더 안전한 국가안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자유주의가 재래적 군사위협의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왕에 국제체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한 가치들, 예컨대 민족주의 등의 문제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쉽게 수락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두개의 체제는 어떤 한 쪽이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더 우수한 체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두가지의 체제는 나름대로의 위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할 때 두가지의 체제는 안보를 위해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정책의 수립에서 중요한 점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가지 체제가 갖는 장점들을 여하히 조화롭게 결충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 될 것이다.

4. 국가안보 연구의 문제점들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연구가 너무나 현실주의적 접근이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⁴

첫째, 안보문제는 이론적인 체계적 연구에 앞서 정책결정자가 인식하는 갈등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적 차원에서 먼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따라 그 연구의 강도가 부침되어 왔다. 이러한 우발적 성격(contingent nature)으로서의 안보문제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과 경험적 연구의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그 자체의 적절한 분석방법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때로는 국제관계의 성격으로 때로는 국방문제로 취급되어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편적인 주장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문제의 전반적 추이를 다루지 못하고 개별적인 안보 위협요소들, 즉 군비지출, 무기체제, 방위전략, 핵능력, 억지력, 등 군사력의 지표가 되는 조건들에만 비중을 두어 안보문제를 다룬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연구는 사회정향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주의적(statist) 연구의 성격이 되었다. 이는 정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가중심 패러다임(State-Centric Paradigm)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향은 사회에 대한 국가 통치기구의 우위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존재이유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기관들에 대한 심리적 종속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사회의 제반 세력들은 그들의 기능은 물론 그 존재 자체까지 도전받게 되었다. 개인의 선도적 역할이나 창의적 집단간의 상호작용은 국가에 의해 설정된 통제의 수단으로 제약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사회의 탄력성이 사라지고 소위 안보국가적 경직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세째, 국가안보 연구는 권력정치의 악영향을 널리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군비경쟁이나 권력투쟁같은 국가간 좋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협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이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힘에 기초한 국가안보 정책은 주로 국방문제, 군비문제, 그리고 군사전략과 군사테크놀로지에만 집착하여 불안전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힘의 물리적 요소들과 불안전

4 참조: 이민룡, “우리의안보정책 실태와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 제102호(1991년 1호), pp.89-140; 문정인, “탈냉전과 제3세 세국가안보의 새조명”, 『현대사회연구』 12권1호(1992년 봄·여름), pp. 89-111.

의 요인들에만 연구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불안전을 치유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불안해지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에 빠지게 되었다. 국가는 권력투쟁과 군사력 건설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보란 마치 권력(힘)의 과생물인 양 취급되었다.

네째, 국가안보 연구가 지나치게 전략연구(Strategic Study), 특히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과 연계됨으로써 여러가지의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국가안보이론과 억지이론은 모두 신뢰성과 합리성에 기초해서 전개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억지능력을 보유하고 있나고 믿을 때 적대국가의 공격은 억지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해서 억지이론은 정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억지이론은 양자간의 상호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국가의 사회내의 역학관계를 무시한 결과, 종종 신뢰성과 합리성에 오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물리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함수관계를 직선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여 강력한 군사체계를 구축하여 물리적 힘을 키우면 안보를 성취하고 방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오늘까지의 국가안보 연구 경향은 국가간의 전력 경쟁을 심화시켜 국내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2차적 중요성으로 간주하게 만들었고 국제적으로 더 불안한 불신풍토를 초래하였다.

III. 소련의 안보개념과 정책 변천과정

1917년 블쉐비키혁명 이후 소련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국가안보라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어떤 국가에게나 생존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리고 생존이란 안보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혁명 바로 직후에 블쉐비키들에게 부닥친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나, 제국주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생존의 문제였다. 이러한 생존의 문제는 74년을 지속하다가 결국 블쉐비키들이 세워놓은 공산주의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대외적 팽창을 소련이 가지고 있는 안보개념의 기본요소로 보았다. 모든 서구국가들이 이러한 견해에 완벽하게 일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서구는 소련의 변화를 결코 목적은 변하지 않았고, 전술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평가하여 왔다.

서구가 이러한 견해를 갖게된 배경에는 서구 나름대로 공산주의체제를 적대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련에 의해 제공된 이유도 있다. 우선 첫째로 소련이 군사력에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너무나 많이 의존하였다는 사실과, 또하나는 이데올로기 성향이다. 소련은 세계역사의 흐름이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되어있으며 자본주의의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상타파를 위한 투쟁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무엇이 안보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개념은 소련역사에서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1. 공산주의체제 정착기(1917-1953)

볼셰비키들이 10월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안보문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볼셰비키정권의 존립과 혁명목표의 달성을 러시아 혁명과 같은 혁명이 인접 국가와 다른 지역의 국가에서 성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렇게 되면 국가주권 이란 의미를 잊게되고 계급적 연대성이 민족적 차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러시아 영역을 벗어난 지역의 상황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⁵

그러나 상황은 볼셰비키들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었다. 소련식의 혁명은 불과 몇개의 나라에서만 시도되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볼셰비키들의 혁명이 유일한 경우가 되어버렸다. 소련은 곧 전형적인 전통국가들의 안보문제를 자신도 갖고 있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영토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위협과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혁명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그들의 공산주의체제가 보존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때부터 소련에서는 국가안보와 공산주의체제의 안보가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레닌(Lenin)의 생존시절에 이러한 안보개념의 재정의는 그렇게 쉽게 정착되지 않았다. 레닌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은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해진 신경제계획(NEP)은 물론 소련에 대한 적대적 동맹의 형성을 막기 위하여 취해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비난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혁명을 지원하는 정책과 트로츠키(Trotsky)가 주장하는 영구혁명론을 지지했다.

스탈린(Stalin)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에 소련에는 혁명적 방법으로 안보를 확보하려는 개념과 서구의 근대 국가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통적인 안보개념 두 가지가 소련의 지도자들을 지배했다. 스탈린은 최초로 현대적 전제주의국가를 세우면서 민족국가 경계선을 넘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였다. 처음에 스탈린은 계급적 연대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볼셰비키적 이론으로부터 전진적 방어전략을 채택하고, 독일에서 나치정권의 세력이 강화되어 안보가 위협을 받게되자, 국외공산주의자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이 때 그는 파시스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비공산당, 비공산주의자들도 공산주의조직에 포함시켜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동부와 남부 유럽의 어떤 국가들과도 통일전선이나 동맹관계의 형성에 실패했으며, 급기야는 적대국인 독일과 동맹을 맺었다. 나치와 소련의 동맹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1930년대 말기에 들어가면 소련의 안보개념은 공산주의의 혁명적 교리를 벗어나 전통적으로 민족국가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하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를 내세우고 국내적으로는 그의 개인 권력을 강화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영토의 보전과 안보에 관심을 가졌다. 나치가 침공했을 때, 소련은 공산주의 교리와 반대가 되는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강조하여 국민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공산주

5 스탈린시대까지 안보개념의 변화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많이 참조하였음: Helmut Sonnenfeldt and William G. Hyland, *Soviet perspectives on Security*, Adelphi Paper No.150, Spring(London: IISS, 1979).

의체제의 본질적 요인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2차세계대전의 결과는 스탈린에게 전통적인 안보개념이 소련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음을 깨닫게 하였다. 국내적으로 그는 이를 무시하였으나 국제적으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1940년대 말에 동유럽과 남동유럽에 소련 위성국가들을 세웠다. 이처럼 소련의 안보관심은 인접국가들을 영향력 하에 두어 새로운 대제국을 건설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인접국가들의 공산화, 공산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지와 원조도 안보 개념에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2차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의 안보개념은 소련을 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서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공산당의 성통성유지를 위해서 체제의 안전과 정치질서가 동시에 똑같이 중요하므로 동유럽 위성국가들을 군사적 완충지대 이상으로 보았다. 소련은 이러한 위성국가들의 출현을 1917년 혁명 이후 침체되었던 혁명의 조류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 수단인 힘을 사용한 결과이었다.

스탈린은 소련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히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소련의 물리적 안보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그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소련이 경험한 포위에 대한 정신적 공포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포위’는 그에게 현실로 남아있었다. 독일에 승리했다지만 2차대전은 그에게 커다란 문제를 남겼다. 스탈린은 “어떻게 항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느냐?”는 “이번과 같은 재앙을 어떻게 방지하느냐?”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스탈린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는데 하나는 소련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의 적이 내부의 반대자들과 결합할 가능성이었다. 그러므로 스탈린은 외부의 군사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통제와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소련의 이러한 정책과 태도는 스탈린이 기대했던 것보다 소련의 위치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 넣었다. 서구에 새로운 대소동맹체제가 탄생되었고, 유럽지역에 대규모의 미국 군사력이 영구적으로 주둔하게 되었고, 핵무기가 소련을 향해 배치되었다. 1940년 대말부터 이러한 상황에 부딪친 스탈린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결성하였고 국내적으로 군사적 능력향상을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기초를 공고히하면서 소련의 군사력에 핵무기를 편입시켰다.

소련은 1949년에 원폭개발에 성공하였으나 핵무기의 실전배치는 1953-54년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소간의 핵전력의 차이는 너무나 현격하였으므로 스탈린은 핵무기를 중심으로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소련군사톡트린에 있어서 지상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핵무기는 2차적이었다.

스탈린은 미국의 공격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적으로 우세한 지상군을 유럽에 배치하여 유럽을 인질로 삼아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련의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유럽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련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과장된 평가를 놓게하고 나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미국인들이 지지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Evangelista, 1989:308-311).

2. 강대국으로써 등장기(1953-1985)

스탈린시대에서 흐르시쵸프(Khrushchev)시대로 들어오면 소련의 안보정책은 질적으로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안보영역이 지역적 개념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무기체계 면에서 지상군시대에서 핵과 로켓시대로 변했고, 이에 따라 군사전략 개념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소련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전쟁불가피론'을 1956년 제20차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즉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스탈린시대 소련지도자들의 사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불가피론 개념은 10월혁명 이전에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사용했었다. 그러나 혁명후 그 개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됐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들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강요되는 차취에 항거하고, 사회주의에서 구원을 찾기때문에 충돌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두번의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사회주의 능력이 상당히 신장되어 스스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쟁판이 변했어도 스탈린시대부터 내려오는 두가지의 기본적 사고는 변하지 않았다. 하나는 전쟁의 승리란 적의 군사력을 봉괴하는 것에 의해서만 짱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핵무기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자는 나중에 소련에서 ICBM의 개발과 함께 부정된다. 또한 '평화공존론'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 개념은 공산주의권내에서 속명적, 수동적 또는 패배주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서구에서는 이 의미가 결코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평화공존론이란 국제정치에서 다른 수단에 의한 계급투쟁임을 그 이후에 소련은 보여주었다.

스탈린은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인접국가들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흐르시쵸프는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국가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소련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제3세계에 적용하여 과거 혁명가들이 기대했던 혁명의 성공을 기대하였다. 소련은 식민지 국가들의 해방투쟁에서 자신들이 바로 정통성있는 협력자임을 주장했다. 실제로 갓 독립한 후진국가들이 근대산업국가로 발전하려고 할 때,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모델이 될 수 있었다. 소련은 제3세계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그때까지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포위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소련이 이 포위망을 뛰어 넘어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위할 수 있다고 믿었다(Rubinstein, 1981:214-218).

그러나 제3세계에서 소련의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소련의 발전모델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도 않았다. 소련은 동유럽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소련의 안보와 동유럽에 대한 통제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제3세계에서는 실천불가능하였다.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실전배치하면서 소련의 안보개념은 미국과 경쟁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기 시작했다. 그 경쟁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군사적이었고 미국은 장거리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도 있었다. 소련은 사상 처음으로 자신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않는 나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고 유사시 영토를 유린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문제는 소련에게 중요한 새로운 안보문제가 된 것이다.

소련은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전쟁불가피론과 평화공존 개념을 내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57년 8월 소련은 세계에서 최초로 ICBM SS-6 발사실험에 성공하였고, 그해 10월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포트니크 1호를 발사, 미사일을 운반수단으로하는 핵무기를 출현시켰다. 이러한 과학기술상의 성과는 소련의 군사독트린에도 영향을 미쳐 「미사일핵 우선주의」 즉 미사일 핵무기를 최종무기로 보고 지상군, 해군, 공군 등의 재래식 전력이 경시되고 전략로켓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 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소련의 핵전략으로서 미래전쟁으로 전면 핵전쟁이 상정되고, 제한전쟁의 가능성은 부정되었다. 대미 선제공격과 유럽의 인질화를 통한 미국의 대소 핵공격 가능성을 억지하려는 전략이었다.(Sokolovskiy, 1975:172-213).

흐르시쵸프 시대의 안보정책과 관련된 상황을 요약하면 첫째로 안보문제가 지역적, 기능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되어 국가안보 정책의 관리가 복잡하게 되었고 부담도 증가되었다. 둘째로, 핵문제가 가장 민감한 이슈로 등장하여 미국과의 경쟁은 바로 전략적 핵무기의 균형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세째로 소련 국내정치의 스탈린주의 칭찬은 동구 위성국가들의 자주노선을 촉진시켰고, 유고와 화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분쟁이 시작되고 새로운 안보전략이 지역주의에서 범세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다.

브레즈네프(Brezhnev)시대의 특징은 국가안보를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군사력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함수로 보았다. 브레즈네프가 등장할 당시에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은 1945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고 숫자적으로 기술적으로 미국에 비하여 열세하지만 전략적 군사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미국에 의한 선제공격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있었다.

브레즈네프가 재래식 및 핵전력을 계속 증강시킨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지가 있다. 소련의 쿠바위기에서 받은 굴욕과 중국의 핵실험성공(1964) 및 미사일발사 성공(1966)은 소련으로 하여금 핵전력 증강에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 쿠바에서의 수모보다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이 더 큰 충격을 주었다. 1966년 중국의 사상 첫 MRBM(CSS-1, 동풍2)배치, 1967년 수소폭탄의 실험 성공은 소련의 기존 대중국전략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제 소련은 핵무기 분야에서도 두개의 전선을 유지해야만 했다. 소련은 대규모의 군사력을 중소 국경지대에 배치하였으나 중국은 굴복하지 않았다. 중국의 전역적 핵무기보유는 소련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핵보복 공격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시베리아 낙부지역 및 극동지역이 인질화되고 거기다가 미국의 봉쇄정책까지 합쳐서 소련은 사면초가의 상태가 되었다.

또하나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배경은 미국과의 경쟁관계에서 나온다. 1965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 개입은 브레즈네프로 하여금 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하였다.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련의 국제적 의무를 위해서, 또한 베트남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련은 베트남을 지원해야만 했다. 따라서 소련은 국방예산을 증가시키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특히 해군의 전력 향상에 노력하였다.

베트남전쟁을 지원하는 계기로 소련은 군사력의 사용이 정치적 배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대접을 받아야 하며, 미국과 평등하게 국제기구와 조약에서 그 위치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즉 소련의 국가안보 개념 속에는 미국과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소련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영향력과 힘을, 원하는 어느 곳에나 두 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초능력의 소유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소련의 국가안보는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중장시켜야 획득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소련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상황으로 정의될 때, 즉 소련이 추구하는 미국과 동등한 안보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끝이 없어져 버렸다. 1960년대 말에 소련의 핵 미사일 수자는 거의 미국과 동등했지만 이것은 평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사일 기술은 소련보다 앞서 있었고, 나아가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의 미사일, 중국의 위협도 대처해야만 했다. 소련의 지상군이 미국보다 더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소련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이 될 수가 없었다. 심리적으로 소련 지도자들은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보았고, 자신은 이제 강대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가로 보는 심리적 열등상태에 빠져 있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같은 지상의 적이 없고, 소련처럼 사면에 비우호적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았다.

스탈린은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의 발휘를 위한 수단으로써 군사력을 첫째로 중요시하였는데, 흐르시쵸프는 경제력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그는 소련의 경제력이 성장되어야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제거할 수 있고, 특히 미국의 경제적 능력을 따라잡아야, 다른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는 군사력이 국제관계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자원배분을 둘러싼 브레즈네프와 코시킨의 논쟁(1966-67)에서 군사력을 중장시키기 위한 중공업 중심의 노선을 취한 브레즈네프가 승리하게 되자, 자연히 브레즈네프와 군부는 협력관계가 되었고, 브레즈네프는 군사력 증강에 자원을 보다 많이 분배하면서, 군부에서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켰다. 브레즈네프는 흐르시쵸프가 실제로 군사력을 중장시키지도 않으면서 증강시키는 체하고, 실제로 경제력을 증가시키는 정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대결을 피하고 조용하게 군사력 건설을 진행시켰다. 1971년 24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평화프로그램’(Peace Program)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때까지 소련외교와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브레즈네프가 죽을 때까지 택한 군사적 노력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Popov, Ovsyany, and Nikhamin, 1975: 33-37). 브레즈네프시대의 소련

안보정책은 유사시 재래식 또는 핵무기 공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을 때, 상대방의 공격을 확실히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 보장된다는 일방적 또는 절대적 안보 개념이었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서 가장 완벽하게 대처하려 했다 (McC Gwire, 1990:14).

스탈린, 흐르시쵸프, 브레즈네프, 그리고 기타 소련 지도자들은 소련은 본토의 국경과 서구 쪽의 전초기지에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해서도 안된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소련의 군사력이 증가되면서 소련이 생각하는 국가안보의 정의도 확대되었다. 순서대로 보면, ① 본토의 안전, ② 동구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 보장, ③ 소련 국경과 인접한 국가들과 우호 또는 동맹관계유지, ④ 마지막으로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 미국과 동등한 역할 수행과 영향력 행사였다. 그러나 확대된 안보영역은 군사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소련은 스스로 보여 주었다.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불려받았지만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국제적으로 더 고립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게된다.

3. 공산주의체제 붕괴기(1985-1991)

어떤 국가이년간에 안보의 목표는 ‘영토와 주권의 보존’과 ‘국가이익의 방어’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존하며 방어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다. 어떤 국가들은 그들의 안보를 군사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어떤 국가들은 군사력과 외교를 동시에 활용한다. 소련은 위에서 본 것처럼 절대적 안보차원에서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그들은 충분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국내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대외적으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고르바초프(Gorbachev)가 등장할 때까지 이러한 안보개념이 소련의 국내외 정책의 모든 면과 연결되어 있었다. 스탈린의 강제적인 농업집단화와 중공업 우선 정책, 동구라파국가들의 위성국가화, ‘자본주의국가에 의한 포위’ ‘평화공존’ ‘힘의 상관관계’ (Correlation of forces) ‘양대진영론’의 개념, 브레즈네프의 대규모 군사력건설 등은 소련이 보여 온 독특한 안보정책의 표출양식이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에 소련공산당의 서기장으로 등장한 이후부터, 소련의 새로운 안보개념은 전통적 개념과 비교하여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문제의 한 측면이지 결코 다른 측면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책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에서 그는 “핵전쟁은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또는 어떤 다른 목적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안보는 더 이상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무력 또는 억제력, 또는 겸과 방패의 완벽성에 의해 지켜질 수 없다. 안보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결정과 군축이다”(Gorbachev, 140-141). 그는 안보의 최대의 위협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이며, 군사력의 증강은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국가안보의 달성을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포괄적(Comprehensive)인 안보개

님을 제시했다.

두번째로 소련의 안보개념에 도입된 새로운 요소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이다. 정치와 경제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또는 mutual dependence)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 핵무기에 의한 파멸을 회피해야하는 공통의 필요성과 이제 드러나고 있는 세계경제의 현실성이라는 두가지 문제가 상호의존성의 대표적 이슈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국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경제생활로 얹히어 있고, 핵에 의한 죽음의 공포, 생태계의 파괴, 부자와 빈자의 범세계적 대결 등의 위험에 부딪혀 있으므로 인간사회는 대결보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점점 더 서로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점점 더 서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한다(Gorbachev, 137).

안보문제에서도 어느 한 나라의 국가안보는 다른 나라의 국가안보에 널려있다는 명제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소련의 안보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안보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반응을 하면 그것은 소련의 군사적 안보를 위협스럽게 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소련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 반대로 소련이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한다면 이 반응은 미국의 이익에 똑같이 부정적인 결과 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측은 자신의 방위정책이 상대방의 군사력 건설에 촉진제로 작용하여 결국은 어느 쪽의 안보에도 도움이 안되는 군비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안보’ 또는 ‘상호안보’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는 위기감과 핵시대에 있어서는 미·소가 강대국이라 하여도 국가안보를 일방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소련안보개념의 새로운 요소는 “국제관계에서 이데올로기 역할의 평가절하”이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치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기회만 있으면 파괴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해난 때부터 고르바초프가 정치권력을 잡기 전까지 소련이데올로기의 기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국제관계에서 계급투쟁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흐르시초프가 평화공존을 주장했고 브레즈네프가 미국과 데탕트를 추구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데올로기투쟁, 정치적 투쟁이었다. 흐르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의 핵심은 경제적 경쟁, 평화를 위한 정치적 대화, 사상 투쟁이며, 브레즈네프의 데탕트정책의 기본지침도 경제적 협조, 군사적 경쟁, 사상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학자 니키틴(Aleksander Nikitin)은 이제 러시아 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① “이 세계는 두개의 사회-정치체제로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②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이 국제관계에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커다란 힘이다”. ③ “역사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오고, 사회주의의 역사적 승리를 가져온다”. ④ “평화공존은 계급투쟁의 특별한 형태이다”. ⑤ “사회주의의 이익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다”. ⑥ “신사고는 맘스주의와 직접적인 연계

가 있으며 발전된 내용이다". 등이 폐기 대상으로 지적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계급투쟁 개념 대신에 전인류의 가치를 강조했다. 사람들이 모두다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전인류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핵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평화공존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1986년 제27차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새로운 당강령은 평화공존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계급투쟁의 특수한 형태로 정의했던 종래의 정의를 삭제하고, 평화공존을 군사력이 아닌 선린과 협력이 지배하며 과학기술과 문화의 폭넓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제질서라고 규정하였다.⁶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더 이상 소련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아니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냉전에서 패배가 소련의 국가안보에 반드시 손해를 가져오지 않았다. 냉전시대에 유럽에서 대규모의 전면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소련은 대단히 걱정했다. 이제 그 확률은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아프카니스탄, 몽고, 베트남, 동구국가들로부터 군부대의 철수, 무기생산과 군사력의 감축 등이 소련의 안보를 악화시키지 않고 있다.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벗어나 서구와 경제교류는 국내경제개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련의 안보추구에도 매우 안정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기존의 영토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안보영역을 확대하였고 동시에 군사력도 증강시켰지만, 안보에 대한 불안의식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여 냉전에서 실패는 소련이 70여년간 추구했던 안보정책의 목적을 거의 다 성취하게 만들었다.

IV. 최근 안보정책변화의 원인과 배경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일방적 안보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와 투쟁을 고취 하던 소련의 안보정책이 왜 포괄적, 상호의존적, 비이데올로기적 안보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나? 좀 더 넓게 말하여 왜 고르바초프는 빠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찌를 기초로 하는 대내외정책을 추구했으며, 그런데 왜 성공을 못하고 소연방과 공산당은 해체되었는가?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어떤 전문가는 공산주의체제가 태어난 때부터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Kennan, 1951:125),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소련사회의 동태성(Dynamics)이 정지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렇게 소연방, 소비에뜨 국가체제, 공산당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⁷ 또한 그 원인의 종류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6 "Political Report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to the 27th Party Congress," *Novosti Press*, February 26, 1986, 또는 *Current Digest of Soviet Press*, Vol.37, No.8, pp.4-32.

7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저, 『대실패: 20세기 공산주의 출현과 종말』, 명순희 옮김, 서울:울유문화사,

로 매우 다양하게 얹히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실패와 외교적 고립이 소련에서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써 가장 많이 열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련의 변화과정을 볼 때(1917년부터) 정치지도자의 변화가 소련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이었다. 역대 공산당 서기장이 자신의 국가와 국제체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Perceptions), 감명(impressions), 기억력(recollections), 편견(biases)이 새로운 정책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⁸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이 되어 소련의 안보정책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방어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게 한 것은 커다란 변화이다. 그러나 현재 소련의 붕괴와 안보개념과 정책의 변화는 소련지도자의 인식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국내적 요인으로써, 이데올로기와 정통성, 다민족과 정치통합, 경제적 침체, 군사적 딜레마, 대외적 요인으로써 외교정책의 실패, 국제적 환경을 설명하여 최근 변화의 원인을 찾아 보려고 한다.

1. 이데올로기와 정통성

정치적 성통성의 근거는 정치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르다. 어떤 정치 이론가들은 어떤 정부가 법에 의한 지배, 적합한 절차에 따른 통치,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면 그 정부는 정통성이 있다고 한다. 다른 이론가들은 정치의 정통성을 전통적 가치관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웨버(Max Weber)는 정통성의 정도를 국가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순응과 수용의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Gerth and Mills, 1958:77-83). 한마디로 정치권력의 정통성이란 국민의 마음속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치질서 속에 있다.

과거나 현재나 정통성의 근거가 되거나, 정통성을 창출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로 전통, 규범, 관습, 그리고 역사적 관행을 유지하여 정통성을 유지 또는 보색하며, 둘째로는 정치지도자가 이념과 상징조작을 통해 정통성을 만들고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며, 세째로는 제도적, 기능적, 법률적 개선과 구조적 개편을 통해 합리적 정통성을 보색하는 것이다.

소련은 공산주의체제의 정통성을, 즉 자신의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맙스-레닌주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주민들에게 계급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회를 약속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자본주의에 대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근대적인

1989은 유일하게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예언했으나 그렇게 갑작스런 붕괴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음.

8 참조: Valerie Bunce, "Leadership Succession and Policy Innovation in Soviet Republics," *Comparative Politics*, Vol.11, No.4(July 1979), pp.379-402; Philip Roeder, "Do New Soviet Leaders Really Make a Difference? Rethinking the Succession Conn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9, No. 4(1985), pp.958-977.

전체주의 국가를 세웠다.

어느 국가의 체제가 성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국가가 위기에 부딪쳤을 때 기존의 헌법과 제도를 유지하느냐 또는 폐지하고 새로이 창조하느냐가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소련 사람들은 블레비키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당, 소비에뜨 국가체제, 소연방체제를 다 봉괴시켰음은 물론 맥스·레닌주의까지 버렸다.

이처럼 공산주의체제와 이론을 모두 포기한 배경에는 공산주의이론과 체제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임은 물론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고르바초프가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말은 바로 소련의 통치형태가 비인간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공산주의자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법과 제도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정권의 정통성을 얻기 위한 선거절차가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를 모방했으나 형식적 절차라기보다 인간성을 기반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제일 먼저 제도적으로 개혁한 것이 선거법과 제도였다. 세째로는 역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이론이 당에 의해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당은 존재의 근거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당은 특권, 공포, 냉소의 상징이며, 주민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다. 공산당이 계급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생산하고 있었다.

네째로는 소련지도자들이 국가안보를 바로 공산주의체제의 안보와 연결시켰으므로 체제의 정통성이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외환경을 항상 적대시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도전을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체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련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경찰과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을 감시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의 위협을 과대하게 평가하여 경직된 안보이데올로기를 창출, 국비 을 세뇌시켜왔다.

국제적으로도 공산주의의 정통성은 쇠퇴하였다. 나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타국을 지도하는 역할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존경하고 모방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성공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Nye, 1990).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식민지국가들이 독립하였을 때, 소련의 산업화과정은 제3세계국가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와서는 소련경제는 성공적인 모델에서 낙후된 모델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국제적으로 또 하나 소련의 사회주의 정통성을 쇠퇴하게 만든 것은 인권문제이다. 한 때 소련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여 상당한 정도로 국제적 정통성을 세웠으나, 1970년대 이후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인권의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한 국가로 판명됐다. 특히 1975년 헬싱키조약을 체결한 이후 소련의 정통성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졌다. 국내적으로 공산주의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인사들이 인권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고, 국제적으로 소련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한 감시와 비난이 거세어졌다. 경제발전의 정체와 인간의 기본권 억압은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정통성을 커나랗게 훼손시켜 1980년대 말

소련변화의 배경을 제공했다.

2. 다민족과 정치통합

국가란 물리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관념체이기도 하다. 나의 국가는 귀속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 강한 정신적 구심력을 지니지 못한 국가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국가의식의 승화된 표현은 국가이념으로 나타난다. 이슬람주와 민주주의처럼 보편적 원칙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막스·레닌주의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국가이념이 확고하고 지속적이면서 국민들이 낭연하게 받아들이면 국가는 통합을 이룬다. 그러나 국가이념의 뿌리가 약하거나 표방된 국가이념이 허구적 수사에 지나지 않을 때 국가이념은 내부결속에 촉매가 될 수 없다. 허구적 국가이념은 그 자체가 국내정치를 불안정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

근대화이론에 따르면 정치통합은 모든 국가가 자동적으로 성취하게 되는 역사적 순리로 보았다. 근대화의 특징인 산업화, 사회구조의 미분화, 도시화, 교육수준의 향상, 언론매체의 확산,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확장 등은 한 국가영토내의 다양한 종족집단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준다는 것이다(Deutsch, 1966). 그러나 실제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한 영토내의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았다(Connor, 1972).

이처럼 정치적 또는 국가적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는 민족, 종족, 또는 집단들 간에 분열, 갈등,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 표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통합위기의 심화는 정치적 분리주의를 배태시키고, 이는 곧 영토와 주권의 보존이라는 국가의 본질적 가치를 위협하게 된다. 정치적 분리주의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정도로 주권국가의 안보문제로 등장한다. 특히 소수민족과 종파들이 외부세력과 연계를 구축, 국내정치로 침입해 들이오면 통합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위기로 간주하게 된다.

1917년 10월 혁명이후 소련의 지도자들을 계속 괴롭혔고 끝까지 해결못한 문제는 공산주의체제의 정통성, 경제발전, 그리고 민족문제라고 여겨진다. 소수민족들의 지속적인 강렬한 민족의식, 완전 자유선택 이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곤란성 때문에 역대 소련지도자들의 민족정책은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졌으며, 성공적이지 못했다(Allworth, 1990:24-46).

소련의 민족정책은 기본적으로 막스의 세계동포주의와 레닌의 민족자결원칙이었다. 막스는 전세계가 사회주의화 되면 개개의 민족은 하나의 세계적 시민사회로 융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민족문제로 인한 투쟁을 가정했다. 그의 「공산당 선언」의 내용 중에는 “본질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형식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부르조아지와의 투쟁은 초기에는 민족적 투쟁이다.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는 무엇보다 먼저 자국 부르조아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가 있다.⁹ 이

⁹ K. Marx and F. Engels, 『공산당선언』, 남사일 역, 서울:백산서당, 1989을 참조.

내용은 소련 민족정책에 “형식에 있어서 민족주의,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발단을 제공하고 있다.

레닌은 내전기간(1918-1920) 중에 민족자결원칙을 정책으로 실시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민족해방운동으로 분출된 피역압민족의 혁명적 에너지를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족자결권의 인정이 불가피했고, 둘째로는 그는 분리의 자유만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국가연합, 즉 민족간의 융합을 가능케 하리라고 생각하였다(Pipes, 1967: 127). 이러한 원칙은 민족자결이라는 원심력적 경향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구심력적 경향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내전이 끝난 이후 레닌의 기대와는 달리 소수민족들이 자결권을 바탕으로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전민족을 포함한 연방제도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민족정책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① 민족자결권 인정, ② 민족과 언어의 완전한 평등 보장, 그러나 ③ 민족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의 조직과 당을 분리하는 것은 반대하였다(Kreindler, 1977:86). 즉 레닌의 민족자결원칙에는 소수민족의 자유와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분리독립을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스탈린부터 고르바초프까지 소련민족정책은 러시아인에 의한 완전한 동화를 목표로 하는 강경정책과 개별민족문화를 최대한 인정하는 느슨한 정책을 왔다갔다하면서 새로운 소비에뜨인간, 새로운 공산주의자의 창조를 목표로 하였다.

연방제도를 유지하면서 120여개의 민족을 러시아화하려는 정책은 실패했다. 우선 막스-레닌주의가 연방내의 모든 주민들을 단결시켜주는 역할을 못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통합하고, 문화적 개별주의를 인정하였지만, 그 학계가 뚜렷했다.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언어, 문화, 역사, 지리적 위치가 연방내에서 강점으로 활용될 수가 없었으며, 공산주의이론은 오직 복종과 인내만 강요했을 뿐이다. 즉 소련 지도자들은 타민족들이 단결할 수 있는 이념제공에 실패했다. 국민과 영토라는 물리적 기반, 통치기구로써 정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권이 있었으나 연방은 분해됐다. 정신적, 심리적 요소가 국가의 구성에 얼마만큼 중요한가의 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구는 영토, 국민, 통치기구란 면에서 미흡하고 주권이 없어도 팔레스타인들의 마음 속에 강력한 목적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로 정치적 측면에서 소련국가이념에 따르면 민족 및 민족집단간의 권리평등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소연방과 민족사회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소비에뜨 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 제72조에 의하면, 각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탈퇴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헌법조항이 적용된 예는 한번도 없었으며 러시아인과 타민족 사이에는 정치적 불평등과 피지배로 인한 갈등만이 커졌다. 러시아화정책은 대러시아 민족주의에 의한 러시아인우대정책으로 구현되었고, 최고권력기관인 공산당과 군대에서 소수민족들은 차별대우를 감수해야만 했다. 소련공산당의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관인 정치국에서 러시아인과 타민족출신의 비율은 아래 <표 1>과 같았었다.

군대에서의 차별대우도 정치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우선 소비에뜨 군대 장교단은 러시아화 되었다. 콜튼(Timothy J. Colton)의 분석에 의하면 1935-75년 사이 소련

자료에 나타난 원수급장교 144명 중 93.4%가 슬라브계이며, 그중 71.5%가 러시아인이었다. 1975년 당시 영관급장교들 중 97.7%가 슬라브계였고, 그중 64.2%가 러시아인이었다(Colton, 1979:261).

〈표 1〉 정치국원의 민족출신별 비교

민 족	1917-1951	1951	1971	1977	1980
러 시 아	12	7	8	10	11
우크라이나	4	0	4	2	2
백러시아	0	0	1	1	0
계(슬라브)	16	7	13	13	13
유 태 인	5	1	0	0	0
아르메니아	3	2	0	0	0
풀 랜 드	1	1	0	0	0
라트비안	1	0	0	0	0
카자스탄	1	0	1	1	1
계(비슬라브)	0	0	1	1	1
계	11	4	2	2	2
	27	11	15	15	15

자료 : John Lowenthal, *The Soviet Politburo*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p.56.

일반사병의 경우에도 비러시아계는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공용어인 러시아어만을 사용해야만 됐다. 보직에 있어서도 사령부, 전략부대, 전투부대보다는 고된 육체적 노동을 많아 해야하는 공병부대 또는 전투부대에서 보조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제로 경제면에서 소련의 경제체제가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체제였으므로 농업집단화와 강제적 산업화과정에서 그 경제적 운용이 러시아인 위주로 되어 각 공화국의 경제는 러시아·공화국의 경제에 종속화되었다. 민족이익이 무시되었고 이들 지역에 생산되는 제조업의 생산물, 축산물, 농업생산물들이 타지역으로 강제배분되었고 각 공화국내의 많은 자원들이 중앙에 의해 강제로 징발되었다. 각 공화국의 민족들은 소련 전체에 만연된 경제적 낙후, 즉 생필품부족, 농공업분야의 실패가 각 공화국의 경제적 자치권을 무시한 중앙통제식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네제로 사회적인 면에서, ① 언어정책에서 오직 러시아어의 사용을 강조하여 러시아어를 공식언어화함으로써 러시아화를 추진하였다.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을 원하거나, 당과 국가기관에 취직을 하려면 러시아어가 필수이었으므로 타민족의 반감이 매우 높았다. ② 각 민족공화국에 러시아인을 대거 이주시켜 그 공화국에서 지배계층으로 만들었고, 이들 러시아인을 통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것은 그 민족들에게 반감을 샀고 위기의식을 조성했다. 또한 여권제도와 혼합결혼을 통해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러시아 민족적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③ 도시화정책에서 농공업위주정책에 입

각한 도로, 댐, 발전소, 공장건설 등 대규모공사를 위해 외부(주로 러시아공화국)에서 노동력을 대량유입시킴으로써 민족공화국에 러시아인 인구를 확산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공화국 도시생활에서 행정적 위계질서를 필요하게 만들어 관료적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육받은 러시아민족에 의해 지도 및 통제되어 러시아화가 되게 추진하였다.

한마디로 소련의 민족정책이 비러시아인과 러시아인의 융합과 동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러시아인에 의한 비러시아인의 지배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배경에는 러시아인들의 타민족에 대한 우월감, 소련지도자들이 공산주의체제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파생된 부정적 측면 즉 타민족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각 공화국 민족들의 반감과 분리 독립심을 키워주었다.

3. 경제적 침체

소련안보정책변화의 배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경제적 침체였다고 보인다. 소련 체제의 모든 문제점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경제와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다. 군사력건설, 대외정책지원, 체제의 성통성유지 등 모두가 경제적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국민총생산(GNP), 일인당 국부소득, 노동생산성과 과학기술수준이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을 때 소련이 갖고 있었던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두가지이었다: 계속적인 경제성장을의 문화와 기술의 낙후.

1917년 블셰비키혁명 이후 소련은 강력한 중앙통제에 의한 근대화정책을 추진하여 저개발 경제상태에서 미국 다음가는 GNP 규모의 산업국가로 자신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흐르시쵸프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회주의체제는 위기나 대혼란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Schulze, 1986:2). 1950년대 말에 서방학자들 사이에 언제 소련이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까하는 질문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소련은 20년 이상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었다.

〈표 2〉 소련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

연도	1956-60	1960-65	1966-70	1971-75	1976-80	1981-84
연평균성장률	5.9	5.0	5.3	3.7	2.6	2.7

자료 : James R. Millon, “An Overview,” in *The Soviet Union Today*, ed. James Cracraft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79

위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대까지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그런대로 좋았으나

197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고르바초프의 말을 빌리면 “경제는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져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미국에 뒤쳐있고…… 여러분이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그 상태가 더욱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경제성장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 또한 고르바초프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88년 2월18일 소련공산당 당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그는 1960-1970년 사이의 연성장률은 5%에 조금 미달, 1970-75년은 4% 보다 약간 상회, 1975-80년은 3% 보다 약간 상회, 1980년대 초에는 약 2%이었다고 보고했다.¹¹

소련은 또한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한때 소련은 미국과 과학기술경쟁에서 성공한 적도 있다. 1957년 인공위성 스포트니크호 발사와 수소폭탄제 조의 성공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최근에 소련은 컴퓨터화된 기계, 산업로봇, 고밀도로 직접되는 전자회로, 슈퍼컴퓨터로부터 개인용 컴퓨터, 생체공학, 복사기계 등에 서 미국, 일본, 서구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졌다. 1989년에 미국방성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1989년 소련은 컴퓨터와 극소전자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서구에 비하여 5-10년 뒤떨어졌다고 한다. 이 두 분야는 현대 무기체계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소련의 기술적 후진성은 경제 뿐만아니라 군사와 외교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적 낙후는 사회주의만이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진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손상시켰으며, 국제적으로 소련 경제체제가 비효율적인 모델로 되어 버려 소련외교정책 또한 그 지지기반이 약해졌고 군사적으로도 재래식무기의 질적 증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안보에 대한 위협인식을 증가시켰다.

소련경제체제의 비능률성의 원인은 잘 알려진 것처럼 중앙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지시되는 명령 경제체제 때문이다. 성장의 주축을 이루었던 값싼 원료, 풍부한 노동력, 계획에 의한 집중적 투자기회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고갈되고 서구 산업과 경쟁 할 수 없게 되었다. 악천후와 인구의 성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악화시켰고, 생산량합당, 투자의 강제적 배분,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 유지, 중공업 중시 경향, 정책변화와 개혁에 대한 경직성 등이 계속적인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었다.

소련경제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즉 스탈린 때부터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재생산에 매우 낮은 투자순위를 두는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군사우선주의를 반영한 것이며 군사력건설은 중공업에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생필품을 위한 낮은 수준의 투자는 소비자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점차적으로 만연한 생필품 부족현상을 일으켜 체제에 대한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대외정책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군사력에 상당히 의존하였으므로 서구와 군비경쟁 및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소련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¹⁰ *The Boston Globe*, March 29, 1987 quoted in Graham T. Allison, “Testing Gorbachev,” *Foreign Affairs*, Vol.67, No.1 (Fall 1988), p.19.

¹¹ *Pravda*, February 19, 1988.

위에서 본 것처럼 소련의 경제성장율이 1970년대 초반부터 감소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지도자들은 이에 적합한 정책을 왜 놓했을까? 당시 정부의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특혜가 침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장 지배인들과 농업 생산자들에게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정치국의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소련체제의 이념을 건드리지 않고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뿐이다(Levin,1983). 결국 경제적 처방은 지엽적인 변화 또는 일시적인 완화수단으로 국한되어 소련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조직의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

4. 군사적 딜레마

군사적 능력이란 공격을 하려는 적을 억제하거나, 또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병력, 무기류, 일반적인 기술수준, 군사비지출을 위한 재정적 능력들은 계량적으로, 리더쉽, 훈련, 정신력(군기, 사기, 단결)은 질적인 측면에서 군사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할 때까지 소련은 군사력을 꾸준히 건설하여 1970년대 말에는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과 평등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소련군사력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첫째로 소련은 미국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핵강대국이 되었다. 핵무기는 소련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어러(Seweryn Bia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무기는 NATO와 WTO 사이에서 재래식 군사잠재력의 중요한 균형자이며, 소련안보의 지렛대로써 그 역할을 한다”(Bialer, 1986: 272). 두번째 특징은 소련 군사력건설은 모든 지역, 모든 무기체계, 모든 군종에서 이루어졌다. 전역핵무기의 경우에 특히 SS-20미사일과 백파이어폭격기에 의하여 유럽지역에서는 소련에 유리한 군사력균형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 해안경비에 불과했던 소련해군이 1980년대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군전력에 있어서도 미·소간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서구의 이점이었던 공대지미사일의 효과도 소련이 대공방어능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되었다. 소련지상군은 대량의 장갑차, 탱크, 대전차무기, 전술핵무기, 화학무기로 무장되었다.

세째로 소련은 자신의 군사력을 세계 어느 곳이나 원하는 곳에 투입하여,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러므로 소련 군사력의 확장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소련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강대국(global power status)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가지 관점에서 소련의 이러한 위치를 평가할 수 있다. 첫째로 핵파괴력을 기준으로 할 때 오직 소련과 미국만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소련지도자들이 이 세계에서 소련의 참여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는 사실이다.¹²

¹² 1971년 4월 소련공산당 제24차 전당대회에서 당시 소련외무부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의 발언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소련군대는 커다란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국과 동등한 군사력의 건설은 국내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 과도한 군사비지출이 소련경제위기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1989년 국방비로써 773억루블을 제시하면서 1990-91년에는 14%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¹³ 이것은 소련 GNP의 10%보다 적은 규모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CIA와 DIA는 소련의 국방비를 소련 GNP의 15-17%, 어떤 학자들은 GNP의 20-30%까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GNP 20%정도의 군사비지출은 소련의 경제적, 기술적, 경영적 기반을 모두 침체시켜 버린 것이다. 반대로 말하여 군사력 건설의 기초가 붕괴된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결과로 소련의 경제는 더이상 군사력건설과 발전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없어져 소련군대는 서구에 대항하여 군사적으로 싸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이유를 군사과학기술의 낙후에서 찾고 있다. 소련 국내에서 “뻬레스뜨로이카”的 의미가 사회적으로 유행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토의할 적마다 그 출발점이 지난 40여년간 군사력에 투자된 비용이었다고 한다. 소련의 일반시민들은 자신들의 국방비가 GNP의 약 25%라고 하면서 소련경제는 군대를 위해서 존재하지,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2차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 소련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소련군대의 고급지휘관들은 소련경제가 서구의 군사적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련군 총참모장이었던 오가르코프(Ogarkov)는 취약한 경제구조와 능력은 미래의 재래식전쟁에서 사용될 재래식무기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조그마한 전술핵무기만큼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전자무기, 초단시간내에 대량의 정보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지휘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새로운 군사무기와 장비들은 소련의 재래식 군사장비들을 대부분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983년 3월 미국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미국의 SDI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소련의 일부 장성들은 이 프로그램이 공격적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 때 오가르코프는 소련군대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개발분야 투자를 증가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1984년 9월에 보직해임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집권 이후 소련군대는 국가방어에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국가경제의 재건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에게 경제발전과 군사기술의 발전은 가까운 장래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었다.

세째로 소련은 군사교리면에서 이론적, 실천적 양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소련은 1966-67년 이전에는 장차 서구와의 전쟁에 핵무기가 반드시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다. 제한적 사용이든 또는 전쟁기간이 매우 단기적이든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

13 *Pravada*, May 31, 1989.

14 군사적, 외교적 배경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음. Condolezza Rice, "Gorbachev and the Military: A Revolution in Security Policy, Too?" *Forum*, Vol.2, No.4(April 1989) (The Harriman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pp.1-8.

핵 의심하지 않았다. 흐르시쵸프시대에는 이러한 핵전쟁에 관하여, 핵무기의 1차적 역할은 공격이며, 적의 기습핵공격에서도 소련은 생존하여, 남아있는 핵전력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브레즈네포시대에 와서 이러한 군사교리가 수정된다. 1966-67경에 「한정재래식전쟁」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핵무기사용도 선제공격적 역할에서 보복공격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생존성을 중요시하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소련군대는 상차 어떤 분쟁이든 가능한 재래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소련은 1982년에 핵무기의 선제불사용을 선언한다.

소련군 참모부는 점차적으로 핵무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교리를 발전시켰고, 이와 반대로 재래식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련은 항공력, 기갑부대의 중무장화와 기동성 증가, 지휘 및 통신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소련의 재래식공격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나토의 군사교리에 도전적이었다. 점증하는 소련군대의 재래전 능력에 부딪친 미국을 위시한 나토국가들은 이에 대항하는 무기체계와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즉 소련의 영토에서 부대가 동원될 때 WTO와 소련군의 재2제대를 격파한다는 군사교리를 발전시켰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공지전투(Air-Land Battle)교리는 소련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된 교리이며 소련보다 훨씬 앞선 고도의 정밀기술로 무장된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재래식군사교리 뿐만 아니라 서구는 미국에 의한 전략무기 현대화(MX미사일, Trident 2형의 SLBM, B1B전략폭격기)계획과 NATO의 이중선택전략에 따른 Pershing II,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등 전역미사일의 서유럽 배치개시(1983.12), 나아가 종래의 공격형무기에 의한 억지가 아니고 방어무기에 의한 SDI전략은 소련의 무기개발과 군사교리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소련이 재래식 전쟁을 강조하면서 발전시킨 군사교리는 서구의 군사기술과 교리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제 와서 경제적 침체와 군사기술의 낙후 때문에 소련이 핵무기에 의존하며 보다 공격적인 공식군사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공격적인 군사교리가 소련의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소련지도자들은 판단하였던 것이다. 논리적으로 스스로 군사력을 감소시키는 방법만이 소련에게 최선의 방안이었다.

5. 외교정책의 실패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틀은 “힘의 상관관계”(correlation of forces)¹⁵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세계역사는 사

¹⁵ 이 용어는 소련에서 시작했고, 그 의미는 군사력 균형보다 넓다. 적에 대한 그들의 상점과 약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군사는 물론, 경제적 균형, 사회적 안정, 정치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한다. 이 용어는 소련지도자들 자신들이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커졌다.

회주의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붕괴는 불가피하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투쟁, 즉 국제관계에서 계급투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 힘의 상관관계가 소련에게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였다고 소련지도자들은 주장했다. 그러한 근거로 그들은 사회주의국가의 수적 증가, 제3세계에서 독립과 민족해방운동, 서구국가들에 의한 식민지통치의 종식, 소련 자신의 경제적 성장과 군사력발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브레즈네프시대의 테땅뜨와 평화공존 주장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힘의 상관관계는 소련에게 불리하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군사력에서만 초강대국이었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Nadkarni, 1991:242).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후에 소련은 힘의 상관관계 대신에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s)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브레즈네프시대의 말기에 오면 소련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가난하고 저개발된 국가들을 친구로 만들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강대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어 버린 사실이다. 소련은 자신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하게 되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테땅뜨란 자신의 군사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뤄졌다고 믿었다. 즉 소련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나라들이 소련의 이익에 더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련이 군사적으로 강대하여질 때, 이것은 소련에 대한 두려움, 의심, 분노를 일으켰을 뿐만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는 미·중·일이 소련에 대항하여 잠재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유럽지역에서도 소련에 대항하여 나토를 중심으로 서방국가들이 단결하였다. 즉 적을 단결시켰고, 적의 세력을 강화시켜 준 결과 뿐이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때 소련의 강대국들과의 대외관계는 아래와 같았다.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은 미소데땅뜨에 종말을 고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방위정책도 그동안 미국에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던 전략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국방예산을 증가시켰고 재래식군사력의 현대화계획에 따라 새로운 군사력건설 시대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레이건 행정부의 군사력건설은 소련의 관심을 상당히 끌었으며, SDI계획은 소련에게 미소전략적 균형의 파괴는 물론 군사기술적 군비경쟁이었다. 소련이 유럽지역에 SS-20을 배치했을 때 NATO국가들은 단결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유럽지역에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 퍼싱-II 탄도탄미사일을 배치하여 소련에게 압력을 가했다.

일·소관계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때 매우 차가왔다. 일본은 중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의 대소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했고, 미국과 무역마찰은 있어도 미국의 대소정책을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동맹국이다. 일·소관계는 북방 4개섬에 대한 소련의 강경자세와 이 4개섬 일부에 소련이 군사력을 배치하였으므로 1980년대 초에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대내적으로 4개 근대화계획을 기초로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대

외적으로 서구국가들의 대소봉쇄정책에 간접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독자적인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일과 잠재적 대소대응체제를 유지했다. 1980년대 초에 중국은 소련과 정부차원에서 소련과 관계개선을 이루었으나 소련측에 3대 장애물 즉 중·소국 경에 배치된 소련군사력, 캄보치아를 침공한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거절하였다. 소련 또한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때까지 중국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결론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군사력이 증가하였지만 군사력이 정치적이점으로 환산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 지역국가들의 단결을 가져와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소련에 불리한 군사력균형이 되어 버렸다.

제3세계에서도 소련의 외교정책은 강대국들에 대한 정책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1960년대 말부터 소련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여 소련 군대의 깃발이 유라시아대륙에서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휘날릴 때 소련은 세계적으로 돋보였다. 1979년 12월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제3세계에서 소련의 역할은 그 절정에 도달했다. 그러나 1982년 브레즈네프가 죽은 이후 군사력에 의존하는 소련의 제3세계 외교정책은 벽에 부딪치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군사력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레이건행정부의 대소정책이 전세계에서 소련의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소련의 경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제3세계에서 소련의 위치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소련영향력의 상징이었던 민족해방운동이 1980년대에 와서 반소세력으로 변했고, 1960년대, 70년대에 저개발국에 도입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의 모델은 1980년대에 와서 사라지고,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소련 스스로 제3세계국가들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 소련의 친구들이란 이디오피아, 나카라구아, 베트남, 북한과 같은 가난한 저개발국들이며,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었다. 반면에 새로이 신흥공업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대만, 한국, 홍콩 등 아세안국가들과는 관계가 소원했다. 소련도 1980년대에 와서는 군사적 수단 이외에는 제3세계의 우방국들에게 원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1980년대에 와서 사회주의는 제3세계에서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도덕과 윤리의 상징으로서,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경제적으로 저개발된 제3세계국가들에게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새로운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때 소련외교는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 거의 포위되었고, 제3세계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군사력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군사력의 역할을 강조했던 브레즈네프의 외교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6. 국제적 환경

국가안보 정책의 변화는 대내적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위에서는 소련 안보정책이 변화하는 원인과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여기서는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이 소련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려고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최근 소련 안보정책의 변화는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소련이 보이는 변화의 기본적 원인은 국내적이지만, 대외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는 외부세계의 영향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소련의 안보정책 변화는 상당한 정도로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환경의 중요한 측면은 주변국가들이 백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성격이다. 역사적으로 서구국가들의 외교정책의 기조가 바로 소련(러시아) 국가안보의 대외적 환경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한 소련의 경험에서 볼 때 독일은 매우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갖고 있었고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체제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후 소련의 주요적 대국들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다. 첫째로 소련의 첫번째 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미국이지 독일이 아니었다. 두번째의 큰 변화는 독일도 이제는 권위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튼튼한 자유민주주의제도를 갖춘 국가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소련의 적들인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들로써, 기본적으로 평화적이며 소련영역을 침략하거나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는 경향이 거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웃국가들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고 특히 비자유주의적 강대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태세를 갖추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후 서구국가들의 대소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대 소봉쇄정책(Gaddis, 1982), 롤백(Roll Back)정책이 봉쇄정책의 대안으로 나왔었지만 일시적이었으며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대소봉쇄정책은 미국과 서부유럽국가들이 상당히 일관성있게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소련에게 대항하여 온 정책이다.

소련의 이론가들도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소정책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덜 공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Griffiths, 1984). 1980년대 중반에 당시 소련의 학자 프리마코프(Yevgeni Primakov)는 “제국주의자들의 모순성이 반드시 세계전쟁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또는 “군국주의가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동반자는 아니다”라고 언급 했다.¹⁷ 1989년 동구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했을 때 소련은 이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구국가들이 붕괴된 공산주의 국가에 군사적 점령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이처럼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포기한 것은 서구로부터 안보

¹⁶ 여기에서 서술한 내용은 주로 아래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다. Daniel Deudney and G. John Ikenberry,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Soviet Change,” *International Security*, Vol.16, No.3 (Winter 1991/92), pp.74-118.

¹⁷ Cited in McGwire, *Perestroika and Soviet National Security*, p.288.

위협이 온다는 전통적인 소련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이었다.

핵무기발전 또한 모든 국가들의 대외 안보환경을 상당히 변화시켰다. 핵무기의 출현이 힘의 내용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여 지배영역을 확장하는데 군사력을 어느 정도나 이용할 수 있느냐이다. 역사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지배하는 능력은 동원되는 무기가 발휘하는 파괴력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러나 핵무기의 경우는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적인 요인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핵무기로 무장된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며,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는 비용은 반대로 대폭 감소시켜준다. 둘째, 그러므로 상호 파괴 위협과 핵무기의 정치적 제한성은 핵무장국가들에게 핵능력을 서로 규제하는 장치에 참여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소련(러시아)의 역사를 볼 때 영토보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핵무기의 이러한 역할은 소련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역사적으로 소련은 이웃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침략하여 정복도 많이 하였지만, 반면에 침공을 당하여 커다란 희생을 치루었으며 지금도 영토분쟁의 소지가 몇 군데 있다.

오늘날 핵무기의 발전은 영토를 보존하거나, 확대하려는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소련의 경우에 소련이 핵무기로 무장된 국가를 공격한다면 소련의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중심지역 또한 쉽게 파괴될 것이다. 동시에 소련이 중요시하는 주변국가들의 완충적 역할도 적의 핵공격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시대에 국내적 문제와 국제적 간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에 의한 영토확장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데 핵무기를 쓰면 비용만 높았지 실질적인 정복이 불가능하므로, 적의 핵공격을 억제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핵능력만 보유하고, 영토점령은 포기할 것이다. 즉 소련은 핵무기 때문에 서구자본주의국가들에 의해 자신의 영토가 점령될 것이라는 공포와 위협이 거의 없어졌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국제적 안보환경에 과거에 없었던 비공격적 국가들이 주요 적대국들로 등장하여 소련의 대외환경이 매우 양호하여졌다. 그리고 핵무기는 영토공격의 공포로부터 소련을 해방시켰으며, 소련이 이를 강행해도 매우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즉, 주변환경이 소련안보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소련 또한 이것을 인식하여 안보정책을 대담하게 전환시켰다.

V. 러시아의 대한국 안보정책 결정요인

러시아의 대한국 안보정책 결정요인에는 적극적, 소극적 접근요인이 있으며, 과거 소련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안보개념이 변했고, 대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소련(러시아)의 안보정책변화가 동북아시아지역과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배

경은 무엇이고,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정책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와 함께 한·러안보관계를 결정하는 역사적, 지정학적 측면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한다.

1. 한·러간 역사적 안보협력경험

한국인과 러시아인의 최초의 만남은 1246년 7월22일(양력) 몽고의 수도 카라코럼(Karakorum)에서 있었다고 한다(박태근, 1984:1). 1860년 중국과 러시아간에 체결된 「북경조약」에 의해 두만강지역 약 17km가 한국과 러시아간에 국경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1884년에 한·러간에 최초로 공식 관계를 맺는 「우호 및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공식적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호 안보협력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접촉이 4번 있었다. 이러한 접촉의 역사적 단계는 오늘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포함시키면 ① 1896-1905, ② 1917-1920s, ③ 1945-현재(북한), ④ 1990-현재(한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러시아는 1884년 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한양과 3개의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1888년에는 두만강과 연해주(Maritime Province)를 통하는 육로부역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였다. 당시 한국의 내정은 중국과 일본의 간섭, 조선왕조의 무능, 사회적 불안 등으로 어려웠다. 러시아는 한국에 간섭할 기회가 있었으나 불간섭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1884년에 한국이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최분형, 1984: 49-74).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관심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변했다. 당시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위테(Witte)에 의한 야심찬 경제발전계획,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만주지역의 보호 문제 등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또한 일본에 의한 한국의 독점적 지배를 방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의 갑시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던 고종이 1896년 2월11일 러시아공관으로 피신하여 일년간 거주하면서 정무를 보았다(이현종, 1984:159-184). 당시 고종은 일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러시아나 미국의 보호를 원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고종의 아관파천을 환영하였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조선의 왕실을 보호하고,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킬수 있는 권리(특권)를 획득하였다. 이 때 일본은 러시아의 모든 권리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에게 한국을 39도선으로 분리하여 서로 통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러시아가 거절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러·일전쟁(1905)에 패하여 철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쇠퇴하기 시작하는 1904년 초에 러시아는 만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에게 암록강 선에서 한반도를 분할 통치할 것을 일본에게 제의하였으나 일본이 거절하였다.

한국과 러시아가 안보문제 차원에서 만나는 제2차 접촉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상태에 있었으며,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시 시작했다. 독립을 찾으려는

한국인들에게 맑스-레닌주의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매력적이었고, 일본과 서구국가들이 공산주의세력에 의해 세워진 정권을 봉괴시키려는 무력간섭을 저지시켜야 하는 불 쇄비키들은 지원세력이 필요하였다. 러시아 영내에 있었던 많은 한국사람들이 레닌의 제의를 받아들여 소련을 위해 불쇄비키들의 군대에 가담하였다(Scalapino & Lee, 1972: 3-11). 이러한 사실은 1919년 7월26일 이즈베스치야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혁명가들이 적군에 편입되어 한국인들만의 부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차 일본과 싸울 것이라고 하였다(In-ho Lee, 1980:277-278). 이러한 사태는 소련에게 한국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별 성과없이 1928년 고려공산당이 해체되는 것으로 2차접촉은 끝났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2차대전시 소련군대에 동원되어 소련을 위해서 싸웠다(Stephan, 1979:123).

세번째 접촉은 일본이 1945년 8월15일에 항복하여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소련군대가 북위 38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당정권을 세웠을 때부터를 말한다. 소련은 한국의 민족주의자들과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시하고 1942년부터 소련군대의 장교로 복무한 김일성을 지지하면서 북쪽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구축하였고 1950년 6월25일에는 한반도전체를 소련의 통제하에 두려고 김일성을 앞세워 한국을 무력 남침하였다. 소련은 한국의 공산화에 실패하였지만 전쟁 이후 계속 북한의 절대적 후원국가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현재 러시아가 그 임무를 이어 받아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남한에 의한 북한점령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소련은 경제협력을 첫째 이유로 내세워 한국과 1990년 9월30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이제 러시아는 남북한의 안보문제에 공식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한국 접근 행태를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상황이 허락하면 러시아는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려고 한다. 그 예로 1896년 아관파천이 있었을 때와 1950년 한국전쟁 도발이다. 둘째로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한 러시아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경우는 1884-1896년 사이의 러시아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세째로 한반도를 반 이상으로라도 분할하여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이익을 지키려한다. 1904년 러시아는 일본에게 한반도를 분할해서 서로 나누어 영향력을 행사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한국이 자신의 이익 보호에 중요하지만 괴를 훌리면서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있다. 1905년 러시아는 일본과 한국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며, 국내 정치권력투쟁, 국제적 위신, 만주의 이권보호를 위해서 싸웠다(Malozemoff, 1958:248). 한국전쟁의 경우, 소련은 미국의 즉각적인 전면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낚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접근한 그 이유와 배경은 첫째로 경제적 이득의 획득이며, 둘째로는 가능하면 한국에 자신의 영향력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한국을 지배하려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대로 러시아가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또는 한국을 점령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첫째로 국내적으로 정치적·경제적 곤란이었으며, 둘째로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한·러간의 안보협력의 역사적 경험은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러간에 안보협력이 잘 되었다고 했을 때는 한국의 주권은 러시아에 의해 거의 통제되었고 (조선 1896-1905, 북한 1945-1950s), 한국이 절망적으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할 때 러시아는 떠나버렸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의 독점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커다란 목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문제로 한반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능력이 없다.

2. 지정학적 요인

한·러관계의 지정학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에서 두나라가 국경을 같이하는 이웃국가라는 사실이며, 둘째로 세계적인 4대강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유일하게 만나는 곳인 한반도와 관계를 갖게되므로, 4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안보구조가 한·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반도가 지속적으로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도 상당한 부분은 4강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시아국가라는 주장도 그 영토가 유럽에서부터 지상으로 아시아지역까지 뻗어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영토의 4분의 3이 아시아지역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3분의 1이 러시아 영토이다. 소련연방의 해체로 러시아의 지리적 중심은 더 아시아 쪽으로 이동했다. 소련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에게 아시아의 비중은 경제, 지리, 안보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벨티 3국과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됨에 따라서 러시아가 바깥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는 극동지역의 나호드카(Nahodka), 보스또초니(Vostochny),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ck) 뿐이다.

현재 러시아는 자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를 지리적 위치보다 시베리아 개발이 자신의 경제발전과 더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기간산업과 중요한 자연자원은 불균등하게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산업의 80% 이상이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우랄과 유럽지역에 위치하여있다. 반면에 동부쪽에는 자연자원의 60-80%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재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있는 연료자원은 거의 고갈되었으며, 석유공급량의 3분의 2, 자연가스의 2분의 1을 시베리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시베리아개발을 위해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두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 국가에 어떤 지역은 그들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 지역이 그 국가의 생존에 매우 민감하거나 사활적이라면 그 국가는 그 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변 4국의 상호관계에 따라 중요한 상대가 바뀌어 왔다. 한·러 관계에 대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 이해는 전략적이며, 그 이유는 러시아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한반도의 위치 때문”이라고 일

반적으로 말한다(Clough, 1982:175).

중소관계가 악화상태이고, 미·소간의 대결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1980년대 초에 러시아출신 미국인 학자 바실 드미스뜨리친은 한반도가 러시아에 중요한 이유 5 가지를 지적했다(Dmystryshin, 1983:4). 러시아가 한반도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첫째로 중국을 중립화시키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반주를 포위할 수 있게 되며, 둘째로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며, 세째로 미국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제거되므로 일본으로 하여금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계획에 협조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네째는 한국의 부동항을 이용할 수가 있고, 다섯째로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한반도가 소련에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의 위치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극동지역 자체의 지리적 상태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극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는 병참문제, 혐난한 지형, 나쁜 기후 때문에 매우 취약하다. 군사기지 만이 아니라 경작과 거주에 필요한 지역도 기후와 지세 때문에 매우 제한되어있다. 일년 연중 동결지대와 험악한 산악지대가 대부분이라 거주와 경작을 할만한 곳이 별로 없고, 수심이 낮고 쉽게 얼어버리므로 수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오직 아무르와 우수리 강변과 사할린 지역만이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세와 기후를 갖고 있다. 이 지역만이 완만한 경사, 충분한 강우량, 경작할 만한 토질, 연중 120일 이상이 서리가 없는 날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경작지, 주거지, 그리고 군사기지도 건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중국에 노출되어 있으므로(사할린 제외) 안보상 문제가 있다.(Jacobsen, 1974: 1199, Kinsbung, 1965:88-95, Stephen, 1970:1090-91).

극동지역에 중요한 러시아의 해군기지 3개가 있다. 캄차카 반도에 있는 폐드로파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소비에츠카야 가반, 등을 들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일년에 약 85일이 안개로 덮이고, 세달 이상이 얼어 붙는다. 이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방향이 일본을 바라보고 있으며 항구가 외국의 정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결함이다. 소비에츠카야 가반항구는 12월부터 3월까지 빙결되며 안개가 매우 심하다. 7월에만 22일간 안개가 덮이고 있다. 폐드로파블로브스크 항구는 해군활동에 아주 적합하다. 일년에 3-4개월간 항구가 얼지만, 얼음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 쉽게 부술 수가 있으며, 바람과 안개가 거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보급지원이 어렵다(Jacobsen, 1972:155). 극동지역 이외에도 몇개 더 해군기지로 이용되고 있는 항구가 있다. 나호드카(기본적으로 상업용), 보스또츠니(커다란 상업용 항구), 아나디르(베링해 지역), 니콜라예브스크(아무르강의 어업 중심지), 사할린섬에 있는 코르사코프 알렉산드로브스크·코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극동함대는 주기지로부터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또한 매우 심각한 지리적 제한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대양에 진출을 못하고 태평양과 일본사이에 있는 3개의 해협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만 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쓰시마해협(대한해협), 혼슈와 흑카이도를 분리시키고 있는 쓰가루해협, 흑카이도 북쪽과 사할린의 남쪽사이에 있는 쏘야해협을 지나야 한다. 이 해협들이 기뢰로 부설된다거나, 잡수함과 항공기 등으로 봉

쇄된다면 러시아의 함정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태평양으로 나갔다 하여도 돌아오는데 커다란 위험부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러시아(구소련)는 폐뜨로파블로브스크 항구를 개발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립되어 있어서 육로를 통해서 보급지원을 할 수가 없다. 오직 해로를 이용하여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블라디보스토크의 붕쇄는 폐뜨로파블로브스크의 병참지원도 중단시켜 버린다(Jonson and Yager, 1979:51).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권력의 중심부와 극동지역간의 수송과 통신망이 외부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생활환경도 부적합하므로 이 지역에서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취약함을 알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자연적 장애를 시베리아 개발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능력을 볼 때 매우 요원한 일이다.

평상시에 극동지역은 해상수송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물자가 철도를 통해서 들어온다. 러시아의 산업중심지와 이 지역은 거의 지선이 없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2,000마일의 바이칸-아무르철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순식간에 두 철도는 파괴될 것이다. 이 철도의 보호는 군대수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식량공급에 매우 중요하다. 해협이 봉쇄당하고 철도가 끊기는 사태는 극동지역이 고립됨을 의미한다. 극동지역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왜 러시아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 지역을 개발해서 극복하는 것 이외에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작전에 용이하고, 훈련, 보급, 정비에 편리한 군사기지를 찾고 있다. 태평양을 아무런 장애없이 나갈 수 있는 부동항을 갖는 것이 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최대 과제이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일본·미국과 갈등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반도의 위치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세와 기후 때문에 러시아는 한반도의 가치를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개선을 한 것은 러시아에게 대양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며, 정치적 이점까지 포함시키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는 과거보다 상당히 증가했을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과거 일본과 서구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그 지역의 자연자원 개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련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대결관계에서 화해관계로 바뀜에 따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변하지만 한국은 약소국이라 거의 변화가 없다. 역사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면 그 약소국의 안보는 항상 취약하다. 따라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안보협력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

3.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대중·미·일 관계

러시아는 소련의 공산당, 소비에뜨국가체제, 소연방 세 조직이 붕괴된 이후 소련이

1917년 11월부터 1991년 12월초까지 획득한 모든 유산(영토를 제외)을 모두 물려받았다. 현재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중이다. 러시아는 자신의 안보위협은 외부환경에서 오지않고 있으며, 카나란 문제는 주로 정치·경제개혁과 관련이 있는 국내문제들이며, 경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즉 대내적 문제가 러시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변화 중인 이 시기에 우리 국가이익의 기본축은 국가생존이라고 할 수 있다” (Pleshakov, 1991:14), “러시아는 오늘날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있지 않다.…… 오히려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외부환경을 갖고 있다…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로 경제문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Kozyrev, 1992:8),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러시아 시민들의 일상 생활 향상에 최대한으로 기여하는 일이다” (Kozyrev:10),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주요 견해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생존을 위해서 대외적인 안보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를 독립국가연합 내에 있는 나머지 10개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Kozyrev:10). 그 다음은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서 모든 그의 이웃 국가들과 좋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경제, 과학기술, 문화, 안보문제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지구적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와 전략적 공격무기를 더 많이 감축할 것을 강조하고 자신의 군대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반대한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CSCE가 해오고 있는 것처럼 국가간의 갈등과 위협은 정치적 대화를 통해서 제거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 러시아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대내외적으로 평화적인 환경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러시아의 안보정책도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가 오늘날 아시아를 과거보다 더 중요시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토의 3분의 2가 아시아지역에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아시아국가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러시아는 아시아국가들과 상호신뢰와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경제발전과 이 지역의 긍정적 멤버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는 전통적인 파트너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일본, 아세안국가들, 카나다,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등과 관계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의 균형과 정치적 타협으로 이 지역의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 러시아의 외교 및 안보정책은 미국의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만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지역과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하며 추종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러시아는 1990-1991 걸프전에서 이란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했으며 중동평화회담에서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도와주었고, 베트남에서 자신의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소간에 대립되는 이슈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강대국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러시아는 성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수립하였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소관계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에서 커다란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9년 6월 중국의 천안문사건과 1991년 8월 러시아에서 쿠데타의 실패사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국관계는 긴밀한 협조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군사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이 정기적으로 있고, 무역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을 홀륭한 경제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중국은 러시아가 군사력 균형화를 돋는 우수한 협력자라고 믿고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안보협력 동반자로 만들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군사대국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현재 러시아의 안보정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건은 대일본 관계개선이다. 일본의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나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과거에 비하여 현격하게 감소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북방4개섬 때문에 러시아는 일본과 실질적인 관계증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무부장관 코지레프(Andrei Kozyrev)도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Kozyrev, 15):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일본과 북방영토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관계정상화를 이룩하는 일이다.” 러시아는 일본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수립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기 원한다. 따라서 러시아-일본 관계가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로 돌파구가 생길다면 시베리아 개발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돌파구는 일본과 안보문제에 관해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대일 강화조약체결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일군사동맹체제를 종립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시대에도 소련(러시아)이 갖고 있었던 목적들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45년 이후부터 맺어오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미국은 군사협력 동반자이며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보면 정치·군사면에서는 미국을 통한 간접적 우호관계가, 경제면에서는 한국이 매우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바로 최근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경제적 관계의 발전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등과 같은 문제에 기본적으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국제분위기가 냉전체제의 붕괴로 우호·협력지향적이고, 러시아의 대중국·미국·일본관계와 한국의 대중국·미국·일본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러시아가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접근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대중국·미국·일본관계가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협력의 범위와 정도는 제한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보다 한국에게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으며, 한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미국, 중국, 일본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다.

한·러안보협력은 미국에게 대단히 예민한 분야임이 틀림없다.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안보협력을 환영할 것이지만 군사분야의 협력은 반대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장비와 군사기술을 도입하는 일에 반대할 것이며, 특히 첨

단파학기술의 이전에 대해 러시아에게 자제를 요청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간의 군사작전체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한국에게 경고할지도 모른다. 한·러안보협력이 눈에 띄게 가시화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조기화시키는 이유도 될 수가 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협력하여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러시아보다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한·러간에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된 것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관심에서 러시아의 대한국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중수교를 조기에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러안보협력이 증진되면 중국은 북한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주지시키면서, 러시아에게 남북한에 균형된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한·러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러관계가 현재 일·러간에 문제로 되어있는 북방영토와 공동으로 해역 등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나아가 한·러안보협력이 의미있는 군사협력에까지 확대된다면 일본은 거의 틀림없이 그러한 협력은 일본의 안보에 위협적 요인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좋은 구실이 될 것이며 동시에 북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4.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

1945년 이후 한국은 러시아의 이웃이었으나 어울릴 수 없는 국가이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불과 지난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첫째로, 러시아에게 아시아의 중요성, 시베리아개발의 절박성, 그리고 특히 북방영토 문제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지연되는 텔레비 등의 사정때문에 소련(러시아)에게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경제적 성공, 정치적 민주화, 통일정책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Atkins, 1990:638-641). 둘째로, 중·소분쟁이 진행중일 때에는 중·소가 북한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북한에 접근하였으나 중소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을 때 러시아는 한국에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겼다. 이 두가지 이유는 러시아(소련) 대외정책의 기본개념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데팡드 분위기에 기인한다. 세번째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북방외교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재통일하고 소련 및 동구유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안보정책에 한국은 전략적인 면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번영한 한국이 러시아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는 외부로부터 위협이 없다. 오늘날 러시아안보에 커다란 위협들은 모두 내부에서 오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러나 결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요구된다. 어느 국가이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내적인 안정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좋은 협력관계를 얻기 위해서 외부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다.

자신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러시아는 한반도가 안정적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남북한에게 군비통제를 권한다. 정치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4대 강국의 어느 한 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을 견제하고 한국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한다. 러시아는 주한미군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의 견해를 발표한 적이 없지만 한국인 스스로 가까운 장래에 철수시킬 것을 기대한다. 북한의 해부장에 대해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핵무장을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물론 자신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생각한다.

안보협력에 가운데도 국가 사이의 군사교류와 협력은 매우 예민한 분야이다. 러시아는 한국과 군사협력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상호 무관단 교환외에 군사훈련 참관 교환, 군사교육의 교류, 군사기술이전, 무기판매 등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에게 군사장비와 기술판매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때 한국이 구입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Volkogonov, 1992).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를 팔려는 커다란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는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점보다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며 또한, 한반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면 직접적, 간접적으로 북한과 미국은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며, 반대로 러시아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되고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두개의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4강중에 첫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이 다른 3국가보다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북한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견제하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좀 더 자주적이기를 촉고하면서 남북한 사이에서 평화증재자가 되고 싶어한다. 장차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 및 다양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능동적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소련(러시아)는 1988년부터 두개의 한국정책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였고, 1990년부터는 법적으로 추인했다. 북한은 한국과 같이 1991년 9월에 유엔에 가입했지만 한·러관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노동신문, 1990년 10월5일). 지금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악화된 상태이다.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이 감소하였고 무역규모는 급격히 줄었다. 1992년 북한에서는 군사동맹조약 체결 31주년 기념행사가 공식적으로 없었으며, 러시아의 모스크바방송은 이 조약이 양국관계 발전을 지지하는 법적 근거로써 중요 한 역할을 하지만,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내외통신, No. 7923, 1992. 7. 7).

러시아의 외교 및 안보정책은 몇가지 관점에서 북한의 정책과 다르다. 첫째로 러시아

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더 이상 자신의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사회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세제로 북한은 제3세계에 대한 정책이 아직도 이데올로기적이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커다란 목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제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네째로 러시아는 북한의 안보정책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구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는 북한의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섯째, 러시아가 보기에도 북한의 경제정책은 실용적, 합리적, 국민복리지향적이 아니다(Bazhanov and Bazhanov, 1991:1123-1138). 기본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의 신사고가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러시아의 개혁과 개혁파들을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두개의 한국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남북한 간에 군사력이 균형되기를 원한다.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제주에 왔지, 서울에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분노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서울에 와야만 했고, 30억달라의 경제협력에 대해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어야만 했다. 지난 3월 독립국가연합(CIS)의 총참모장 삼소노프(Samsonov)는 북한을 방문하여 1992-93년 군관계자의 상호 교환 방문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장비 공급을 중단했다고 말했지만 1991년까지 군사장비의 공급은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1988년 12기의 MIG-29, 5기의 Su-25, 1989년에 2기의 MIG-29, 31기의 Su-25, 1990년에 2기의 IL-76, 1991년에 1기의 IL-76을 북한에 팔았다. 최근에 러시아의 외무부는 북한과 체결한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의 제1조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국민일보, 1992년 7월 29일). 문제가 되는 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자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과 안보적 불안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간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인다. 러시아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북한체제가 공고하게 되기를 원하여 북한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관계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안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적 적대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하지만, 한반도의 재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통일된 한국에서 4강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그 영향력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러시아가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려는 배경에는 시베리아 개발, 경제 협력 유치, 태평양지역 진출에 이용, 한반도에서 전쟁방지, 미국의 영향력 견제, 북한을 친러시아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VI. 결 론

소련의 국가안보 개념은 군사적, 절대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포괄적(군사적+비군사적), 상호의존적, 탈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안보수단의 중요성도 군사적 수단에서 비군사적 수단으로, 국가안보 정책도 적대적 정책에서 상호 평화공존 정책으로 변했다. 이렇게 변한 이유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과 제도가 정통성을 결여하여 국민의 지지가 없었으며, 경제적 침체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위협하였고, 군사력에 상당히 의존하였던 외교정책은 경제적 소모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내적으로 군사력 건설과 체제유지의 기초가 상실되었고, 대외적으로 기의 전세계 강대국들과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깨달은 고르바초프가 생존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내적 변화의 범위와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여 결국 공산당 지배체제의 종말과 소련방의 붕괴를 가져왔다.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소련의 붕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러시아와 소련을 거의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하여 단순히 소련의 국가안보 개념과 정책의 변화로만 볼 수가 없다. 분명히 대제국이 붕괴되고 15개국의 신생 독립국가가 태어났다.

소련의 붕괴는 2차세계대전까지 인류역사에서 빈번히 있었던 전통적 양상이 아니다. 소련은 외부세력에 의한 영토적 점령으로 붕괴되지 않았고, 외국과 군사적 투쟁에 패하여 분해된 것이 아니며, 더우기 소련내의 혁명 또는 내란에 의해 해체된 것도 아니다. 순전히 정치지도자가 생존을 위해서 위로부터 개혁을 추진하다가 스스로 붕괴되었다.

소련이 이러한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해체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련은 근대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 민족국가 단위이든 아니든 간에 — 의 결여와 일본 주의사상의 결여에 있다고 본다. 즉 소련주민들은 자신이 어떤 국가에 속해 있다는 귀속의식이 약하였고, 정치엘리트로부터 노동자·농민까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만연하였다. 이처럼 정신적 토대가 약한 위에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만 강조하였다. 그것도 주민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향상시켜주는 경제적 능력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는 국가에 대한 애착이 고갈되었다.

소련의 붕괴는 국가안보가 누구의 안보이어야만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서구와 같은 계약사상 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를 갖고 있지않아도 국민의 의사와 복지를 무시하는 국가의 안보정책은 적어도 20세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안보정책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국민이 되었으므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체제와 헌법을 갖추는 것이 안보의 첫번째 조건이다.

또 하나 소련의 붕괴가 암시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방식을 국제질서의 성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력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생존을 보장한다는 전통적인 방식은 2차세계대전이전에 유효했다. 적어도 냉전시대에는 군사력에 의한 체제경쟁보다 경제, 과학기술 나아가 정치적 도덕성에 의한 체제경쟁이 성공을 가져왔다.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수단, 국가생존을 위한 투쟁수단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성격

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빌리면 투쟁성격에 따라 알맞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1970년대에 주요 전략적 자원이 무기화가 되면서 세계경제가 불황을 맞게 되자 군사적 위협 못지않게 경제적 위협 또한 국가생존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소위 경제안보가 군사안보 못지않게 중요시되었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추세를 감지 못했다.

소련의 붕괴는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소련)의 관계를 막았던 모든 장애요인을 거의 제거했다. 한국의 대러시아 접근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용이해졌다. 장차 한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 한국은 최선을 다 해야한다. 남북한 관계개선이 없이 한러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불안요인이며 의미가 없다. 둘째로 한러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문제를 한국사람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간에도 군사동맹관계는 유지하여도 군사적으로 직접적 의존체제는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째로 한러간에 안보분야보다는 경제와 문화협력이 우선적으로 실천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네째로 한러관계의 발전은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보다 성공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항상 러시아의 대내외동향을 분석,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국내적 농향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대륙에서 변화가 있을 적마다 커다란 재앙을 입었다. 강대국의 정치적 변화는 바로 대외정책의 변화를 동반하며, 이웃국가들이 기대하지 않는 충격을 준다. 1917년 러시아의 변화도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어 많은 고통을 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북한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 강대국을 이웃국가로 갖고 있는 약소국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항상 강대국의 국내정치변화를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문정인

1992 “탈냉전과 제3세계국가안보의 새조명”, 『현대사회연구』, 12권 1호 (1992년 봄 · 여름) : 89-111.

박태근

1984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이전의 한리교섭(1861년 이전)”, 『한로관계 백년사』, 서울 : 한국사연구협의회.

이민용

1991 “우리의 안보정책실태와 발전방향연구”, 『정책연구』, 제 102호 (1991년 1호) : 89-140.

이용희

- 1962 『일반국제정치론』, 서울 : 박영사.
- 조비그뉴 브레진스키(저), 명순희(옮김)
- 1989 『대실패 : 20세기 공산주의 출현과 종말』, 서울 : 을유문화사.
- 최문형
- 1984 “한로수교의 배경과 경위”, 『한로관계백년사』, 서울 : 한국사연구협의회.
- 칼 맘스와 프리드리흐 엥겔스(저), 남사일(역)
- 1989 『공산당 선언』, 서울 : 백산서당.
- 『내외통신』, No.7923, 1992년 7월27일.
- 『노동신문』, 1990년 10월5일.
- 『동아일보』, 1992년 7월21일.
- Allison, Graham T.
- 1988 “Testing Gorbachev,” *Foreign Affairs*, Vol.67, No.1 (Fall).
- Alloworth, Edward
- 1990 “A Theory of Soviet Nationality Policy,” *Soviet Nationality Policy : Ruling Ethnic Group in the USSR*, ed. Henry R. Huttenbach, New York : Mansell.
- Bazhanov, Eugene and Bazhanov, Natasha
- 1991 “Soviet Views on the North Korea,” *Asian Survey*, Vol.31, No.12(December) : 1123-1138.
- Bialer, Seweryn
- 1986 *The Soviet Paradox : External Expansion and Internal Decline*, New York : Knopf.
- Bunce, Valerie
- 1979 “Leadership Succession and Policy Innovation in Soviet Republic,” *Comparative Politics*, Vol.11, No.4(July) : 379-402.
- Buck, Philip W.
- 1974 *The Politics of Mercantilism*, New York: Octagon Books.
- Clough, Ralph N.
- 1982 “The Soviet Union and the Two Koreas,” *Soviet Policy in East Asia*, eds. Donald S. Zagor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lton, Timothy J.
- 1979 *Commissars, Commanders and Civilian Authority: The Structure of Soviet Military Politic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nor, Walker
- 1972 “Nation-Building or Nation-Destroying,” *World Politics*, Vol.24, No.3 (Fall)
- Deudney, Daniel and Ikenberry, G. John
- 1991/1992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Soviet Change,” *International Security*, Vol.16, No.3 (Winter) : 74-118.

- Deutsch, Karl
 1966 *National and Social Communications*, Cambridge : MIT Press.
- Deutsch, Karl and Signer, J. David
 1964 "Multipolar Power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16)
- Dmytryshn, Basil
 1983 "Soviet Perception of South Korea"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eds. Jae Kye Park and Joseph M. Ha, Seoul : Kyungnam University Press.
- Evangelista, Matthew A.
 1989 "Stalin's Postwar Army Reappraised," *Soviet Military Policy*, eds. Sean M. Nynn-Jones, Mass.
- Gaddis, John Lewis
 1982 *Strategies of Containment :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Gerth, Hans and Mills, C. W.
 1958 *From Max Weber : Essay in Soci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77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National Security in Historical Perspective,"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eds. Klaus Knorr and Frank N. Trager, Regent Press: Kansas
- 1975 "Three Models of the Future" *World Polit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eds. C. Fred Bergster and Lawrence Krouse,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 Gorbachev, Mikhail
 1987 *Perestroika :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 Hamper & Row.
- Griffiths, Franklin
 1984 "The Sources of American Conduct : Soviet Perspectiv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2 (Fall) : 3-50.
- Herz, John H.
 1959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tomic Ag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lsti, K. J.
 1967 *International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Jacobson, C. G.
 1972 *Soviet Strategy - Soviet Foreign Policy*, Glasgow : The Glasgow University Press.
- 1974 "Strategic Considerations Affecting Soviet Policy toward China and Japan," *ORBIS*, Vol.17 (Winter).
- Jonson, Stuart E. and Yager, Joseph A.

- 1979 *The Military Equation in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Jordan, Amos A.
- 1981 *American National Security : Policy and Process*,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aplan, Morton A.
- 1964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 Wiley,
Kennan, George F.
- 1951 *American Diplomacy, 1900-50*,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 Kim, Kyung-Won
- 1970 *Revolution and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Kinsburg, Taafe
- 1965 *An Atlas of Soviet Affairs*, New York : Praeger.
- Kozyrev, Andrei
- 1992 "Russia : A Chance for Survival," *Foreign Affairs*, Vol.7, No.2 (Spring) : 1 -
16.
- Krause, Rowrence and Nye, Joseph
- 1975 "Reflections on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World Polit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eds. Fred Bergsten and Rowrence
Krause,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 Kreindler, Isabelle
- 1977 "A Neglected Source of Lenin's Nationality Policy," *Slavic Review*, Vol.36, No.1
(March).
- Lee, In - ho
- 1980 "Russian Interest in Korea in Historical Perspective," *Soviet Policy in Asia-
Expansion or Accommodation*, ed. Han Soong-ju, Seoul : Panmun Book Company.
- Levine, Herbert S.
- 1983 *The Cause and Implications of the Sharp Deterioration of Soviet Economic
Performance*, Washington D.C. : Warton Econometrics.
- Löwenhardt, John
- 1982 *The Soviet Politburo*, New York : St Martin's Press.
- Malozemoff, A.
- 1958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nn, Michael
- 1984 *States, War and Capitalism*, London : Macmillan.
- McGwire, Michael
- 1991 *Perestroika and Soviet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 Millar, James R.

- 1988 "An Overview" *Soviet Union Today*, ed. James Cracraft,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adkarni, Vidya
 1991 "Soviet Perceptions of the East-West Balance : From the 'Balance of Power' to 'Balance of Interests'," *Comparative Strategy*, Vol.10, No.3 (Fall).
- Nikitin, Aleksander
 1992 "What Soviets think on Security and Policy Matters : Shaping Post-Cold war Mentality of the Soviet," *Soviet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ed. Yu-Nam Kim, Seoul : Dankook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1990 *Bound to Lead :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 Basic Books.
- 1988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merican Defense Annual : 1988-89*, ed. Joseph Kruzel, Lexington : Lexington Books.
- Pearson, Maurice
 1982 *The Knowledgeable State : Diplomacy, War and Technology Since 1830*, London : Burnett Books.
- Pipes, Richard
 1967 "Solving the Nationality Problems," *Problems of Communism*, (September-October)
 Pleshakov, Konstantin
 1991 "Our Interests in the Transitional Period," *International Affairs* (November) : 12-20.
- Popov, V.I., Ovsyany, I.D., and Nikhamin, V.P.
 1975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Moscow : Progress.
- Rice, Condoleezza
 1989 "Gorbachev and the Military : A Revolution in Security Policy, Too?" *Forum*, Vol. 2, No.4 (April) (The Harriman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 1-8.
- Roeder, Philip
 1985 "Do New Soviet Leaders Really Make a Difference? Rethinking the Succession Conn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9, No.4. (Winter) : 958-977.
- Rubinstein, Alvin Z.
 1981 *Soviet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1972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ulze, Frederick C.
 1986 *Soviet Foreign Policy Today: Reports and Commentaries from the Soviet Press*,

- Columbus, Ohio : CDSP.
- Sokolovskiy, V.D.
- 1975 *Soviet Military Strategy*, New York : Crane, Russak & Company, Inc.
- Sonnenfeldt, Helmut and Hyland, William G.
- 1979 *Soviet perspectives on Security*, Adelphi Paper No. 150 (Spring), London : IISS.
- Stephen, John J.
- 1970 "Sakhalin Island : Soviet Outpost in Northeast Asia" *Asian Survey* (December).
- 1979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Soviet Union" *Hankuk Kwa Soryon (Korea and the Soviet Union)*, ed. Kang Ju-jin (Seoul).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 1989 *1989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ltz, Kenneth N.
-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Wolfers, Arnold
- 1952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67, No.4 (December).

Determinants and Change of National Security Policy of the Soviet Union

Suk-Ho Lee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explain the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policy of the Soviet Union from the Bolshevik revolution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o clarify the reasons why the communist ruling system and the Soviet Union were dissolved. Further, the issues and concepts about national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were theoretically reviewed and it was discussed about the Soviet security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heoretical part about national security such issues were introduced: difficulty and ambiguity in defining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conflict and contradiction in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the relations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structure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nd problems in studying national security since the end of cold war. The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policy of the Soviet Union we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3 periods divided such as : ① the establishing period of communist system (1917-1953), ② the emerging period of the Soviet Union as a superpower

of the Soviet Union as a superpower in world politics (1951-1985), ③ the dissolving period of the communist system(1985-1991).

In the beginning years of the communist system the Soviet Union did not think about her security in the traditional way, but soon accept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concept of modern state in the Western Europe. That is to say, she took the concept and policy to guarantee the physical survival of a nation state. During the second period the domain of her national security was expanded from the regional to the global and her weapon system changed from the conventional to the nuclear one, while simultaneously the military strategic concept became aggressive. Her security policy heavily depended on military, resulting in severe arms race with the United States. During Gorbachev period the Soviet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changed dramatically in the three aspects : ① the national security depending on military means to non-military ones, ② absolute security to common security, ③ devaluation of ideological ro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last years of the Soviet Union her security policy became comprehensive, interdependent, and non-ideological.

The backgrounds which Gorbachev could make the security policy dramatically changed one were as followings: first, Marx-Leninism as her ruling ideology had not been accepted legitimately by people; second, nationality policy toward minority was failed and consequently political integration could not have been achieved; third, from the beginning of 1970s the Soviet economy was stagnant and the competitive power in international market became so weak; fourth, her conventional military technology began to deteriorate nuclear strategy due to the emphasis on; fifth, all of internationally important and rich countries had become her enemies because her foreign policy had been preponderantly dependent on military power; sixth, her strategic environment was not so aggressive and antagonistic to her security rather than she thought.

Historically,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Russia's security policy toward Korea have been the internal political circumstances. Geopolitically her policies toward America, Japan, and China, have been important. Finally economic interests to be able to get anything from Korea have been considered. Among the four major powers surrounding Korea, Russia has spent the least amount of blood for her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Russia's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passive.

이석호, 국방대학원 교수

'Tel: 375-8245(ex3533) 387-6120(H)

Fax: 309-9774